

정책 토론회

사교육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 일 시 2009년 6월 26일(금) 10: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여의도연구소

# 식 순

- 일 시 2009년 6월 26일(금) 10: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여의도연구소
- 개회사 여의도연구소장 진수희
- 축 사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최구식

## 사회

- 국회의원 정두언

## 발제

-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안선희

## 토론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강윤봉
-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한재갑
-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김선희
- 교육평론가 이 범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최 진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기획분석관 양성광



# 목 차

## ■ 발제문

- **중산층·서민의 학습복지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 1  
안 선 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

## ■ 토론문

- **중산층 서민의 학습복지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 37  
강 윤 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 **사교육비 대책, “확실히” 하라!** ..... 45  
한 재 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장)
- **학교민주화, 생활민주화** ..... 51  
- 지금, 여기부터 공교육체계 정상화를 -  
김 선 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토론** ..... 61  
이 범 (교육평론가)
- **이명박 리더십의 성패=사교육과의 전쟁 승패** ..... 67  
최 진 (경희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방향** ..... 71  
양 성 광 (교육과학기술부 인재기획분석관)



발제문

중산층·서민의 학습복지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안 선 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



## I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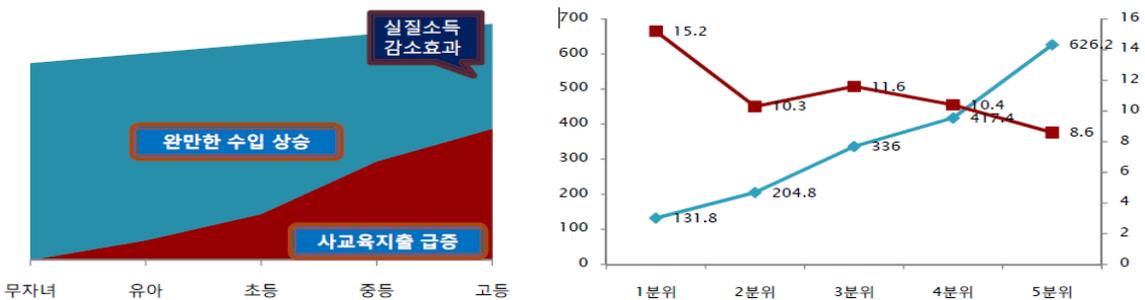
### □ 외부 사회 환경 및 교육 환경의 변화

- 급격한 사회변화 추세 : 과학기술 발달과 지식기반사회화, 인구구조 변화, 세계화·개방화로 인한 산업 및 고용 구조 변화
-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변화 : 학교 교육력과 학습자 학습력 신장,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전 생애 학습복지, 맞춤형 u-학습 요구 증가

### □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교육비 증가, 중산층·저소득층 생활 압박

-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감소 및 빈곤층 증가 추세 심화
  - \* 중산층 비중은 최근 10년간 68.5% ('96) → 58.5% ('06)로 10%p 감소하여 이중 6.6%는 빈곤층으로 이동(전국가구 기준)
- 악성적인 가계소비구조로 인한 적자가계 누적 : 특히,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거비용 등 구조적인 가계수지 악화요인 작용

〈자녀 교육단계 상승에 따른 교육비 부담 및 계층별 교육비 부담 차이〉



### □ 높은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불평등 대물림, 저출산 우려 증가

- 90년대 이후 사교육비 지속 증가로 인한 학부모 고통·불만 증가
  - \* 사교육비 증가: '03 13조 6000억 원, '07년 20조 400억 원, '08년 20조 9000억 원
- 사교육비로 인한 불평등 대물림, 저출산 방지를 위해서는 유·초·중등 교육만이 아니라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직업교육까지 적극 지원 필요

### □ 중산층·서민 중심의 '모두를 위한 교육정책' 필요

- 사교육비 경감, 전 생애 학습복지를 통한 중산층 복원과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으로 추진
- 생애단계별 맞춤형 학습을 통한 국민 평생학습권 보장, 학습복지국가 실현

## II 사교육비 현황 및 문제점

### 1. 사교육비 현황(교육과학기술부, 2009)

- (전체 규모) 20조 9천억원으로 추정, '07년 20조 4백억원보다 4.3% 증가  
 [ \* 소비자물가 상승률 4.7%(교육부문 5.4%) ]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3만 3천원으로 '07년 22만 2천원보다 5.0% 증가  
 한 반면, 참여율(△1.9%p)과 참여시간(△0.2시간)은 감소
  -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일반계 고등학교(24만 9천원)가 가장 높고,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87.9%)가 가장 높음

〈표 1〉 사교육비 규모, 참여율 및 참여시간

구분	총 사교육비 (억원,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p)			1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 (시간)		
	2007	2008	증감률	2007	2008	증감률	2007	2008	증 감	2007	2008	증감
전 체	200,400	209,095	4.3	22.2	23.3	5.0	77.0	75.1	-1.9	7.8	7.6	-0.2
초등학교	102,098	104,307	2.2	22.7	24.2	6.6	88.8	87.9	-0.9	8.9	8.9	-
중학교	56,120	58,135	3.6	23.4	24.1	3.0	74.6	72.5	-2.1	8.9	8.4	-0.5
고등학교	42,181	46,652	10.6	19.7	20.6	4.6	55.0	53.4	-1.6	4.5	4.4	-0.1
일반고	38,655	42,973	11.2	24.0	24.9	3.7	62.0	60.5	-1.5	5.2	5.1	-0.1
전문고	3,526	3,679	4.3	6.7	6.9	3.0	33.7	30.3	-3.4	2.5	2.2	-0.3

\* 〈표〉는 통계청의 200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자료를 인용한 것임

- 영어(11.8%)·수학(8.8%)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음
  - 제2외국어/한문/컴퓨터(△16.7%) 및 논술(△12.5%) 사교육비는 감소

〈표 2〉 일반교과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

구분	2007	2008	증감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고
							일반고	전문고
사교육비	22.2	23.3	5.0	24.2	24.1	20.6	24.9	6.9
- 일반교과	17.8	18.8	5.6	17.4	22.6	17.6	21.7	4.2
국 어	2.2	2.3	4.5	2.1	2.8	2.0	2.5	0.4
영 어	6.8	7.6	11.8	8.0	8.2	6.2	7.7	1.6
수 학	5.7	6.2	8.8	4.6	7.9	7.7	9.5	1.7
사회, 과학	1.6	1.5	-6.3	1.1	2.8	1.0	1.2	0.1
제2외국어 등	0.6	0.5	-16.7	0.7	0.5	0.2	0.2	0.3
논술	0.8	0.7	-12.5	0.8	0.5	0.5	0.6	0.0

- 사교육 참여율은 국어(△3.2%p), 수학(△2.1%p) 등 모든 과목이 감소한 반면, 영어는 전년 수준

〈표 3〉 일반교과 과목별 참여율

(단위 : %, %p)

구분	2007	2008	증 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교	전문교
참여율	77.0	75.1	-1.9	87.9	72.5	53.4	60.5	30.3
- 일반교과	68.4	66.4	-2.0	76.2	68.8	45.3	54.1	16.6
국 어	39.3	36.1	-3.2	44.9	40.1	15.1	18.5	4.3
영 어	55.6	55.6	0.0	62.7	64.1	33.0	39.7	11.2
수 학	58.6	56.5	-2.1	62.6	64.2	36.6	44.4	11.2
사회, 과학	25.6	22.8	-2.8	23.0	35.3	9.1	11.4	1.6
제2외국어 등	14.9	12.9	-2.0	19.7	10.5	2.6	2.4	3.3
논술	10.8	8.4	-2.4	12.8	5.5	3.0	3.8	0.4

- (사교육비 유형별) 일반교과 사교육비 중 학원비(11.0%)와 개인과외비(7.4%)는 증가한 반면, 방문학습지비(△10.0)와 그룹과외비(△5.3%)는 감소
- 유형별 사교육 참여율은 학원수강(0.7%p)과 개인과외(0.5%p)가 증가한 반면, 방문학습지(△2.8%p)와 그룹과외(△1.4%p)는 감소

〈표 4〉 일반교과 참여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 %p)		
	2007	2008	증감률	2007	2008	증 감
일반교과	17.8	18.8	5.6	68.4	66.4	-2.0
개인과외	2.7	2.9	7.4	9.6	10.1	0.5
그룹과외	1.9	1.8	-5.3	11.8	10.4	-1.4
학원수강	10.9	12.1	11.0	47.2	47.9	0.7
방문학습지	2.0	1.8	-10.0	25.2	22.4	-2.8
유료인터넷, 통신	0.2	0.2	0.0	3.2	3.1	-0.1

- (성적순위별) 성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사교육 참여율이 높음
-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은 하위 20% 이내 학생보다 사교육비는 2.4배 더 지출하고 참여율은 36.1%p 더 높음
- 성적 상위학생보다 하위 학생들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두드러짐
  - 상위 10% 이내(5.0%), 상위 10~30% 이내(3.4%), 상위 61~80%(10.7%), 하위 20% 이내(7.5%)

〈표 5〉 학생의 성적 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p)

구 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 %p)		
	2007	2008	증감률	2007	2008	증 감
전 체	22.2	23.3	5.0	77.0	75.1	-1.9
상위 10%이내	30.0	31.5	5.0	89.3	87.7	-1.6
10 ~ 30%	26.6	27.5	3.4	87.0	84.9	-2.1
31 ~ 60%	21.0	22.5	7.1	77.3	75.6	-1.7
61 ~ 80%	15.9	17.6	10.7	62.3	62.2	-0.1
하위 20%이내	12.0	12.9	7.5	51.2	51.6	0.4

□ (지역별) 서울이 읍면보다 약 2.4배 더 지출하며, 참여율은 약 1.2배 높음

〈표 6〉 지역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 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 %p)		
	2007	2008	증감률	2007	2008	증 감
전 국	22.2	23.3	5.0	77.0	75.1	-1.9
서울	28.4	29.6	4.2	80.6	79.1	-1.5
광역시	22.0	22.8	3.6	79.0	76.6	-2.4
중소도시	22.8	24.2	6.1	77.5	75.8	-1.7
읍면지역	12.1	12.5	3.3	66.4	64.0	-2.4

□ (소득수준별) 월평균 소득 7백만원 이상 계층이 백만원 미만 계층보다 사교육비를 약 8.8배 더 지출하고 참여율은 약 2.7배 더 높음

〈표 7〉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p)

구 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 %p)		
	2007	2008	증감률	2007	2008	증 감
전 체	22.2	23.3	5.0	77.0	75.1	-1.9
100만원 미만	5.3	5.4	1.9	36.9	34.3	-2.6
100 ~ 200 미만	10.7	10.8	0.9	59.7	55.3	-4.4
200 ~ 300 미만	17.7	17.7	0.0	77.0	73.7	-3.3
300 ~ 400 미만	24.1	24.5	1.7	84.4	82.2	-2.2
400 ~ 500 미만	30.3	30.6	1.0	89.2	87.2	-2.0
500 ~ 600 미만	34.4	35.6	3.5	90.5	89.7	-0.8
600 ~ 700 미만	38.8	40.2	3.6	92.7	90.5	-2.2
700만원 이상	46.8	47.4	1.3	93.5	91.8	-1.7

- (방과후학교) 참여율(38.7%)은 전체적으로 증가(0.5%p)하였음
  - 월평균 소득 백만원 미만 가구 학생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무상 포함 48.5%)은 전체 계층 참여율(45.1%)에 비해 높게 나타남
    - \* 월평균 소득 백만원 미만 가구 학생의 참여율이 증가한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 방과후학교 참여기회를 확대한 것에 기인함

〈표 8〉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별 방과 후학교 참여율

(단위 : %)

구 분	평 균	100만원 미만	100 ~ 200미만	200 ~ 300미만	300 ~ 400미만	400 ~ 500미만	500 ~ 600미만	600 ~ 700미만	700만원 이상
2007년(유 상)	38.2	29.1	36.6	39.3	40.3	39.9	38.8	37.4	35.9
2008년(유상+무상)	45.1	48.5	48.6	46.3	44.8	42.2	42.8	40.7	41.2
2008년(유 상)	38.7	26.6	36.6	40.4	41.0	39.4	40.2	38.6	39.3
초등방과후 보육	2.1	1.3	2.4	2.2	2.2	2.0	1.6	1.2	2.2
특기적성프로그램	18.1	10.4	15.7	18.7	19.8	18.9	20.0	19.1	18.5
교과 프로그램	19.9	15.8	19.9	20.8	20.5	19.9	20.0	19.4	19.8

## 2. 과다 사교육의 문제점

◇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은 학생·학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교육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불평등의 대물림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국가적 피해를 유발

### □ 과도한 가계 부담

- 중산층 이하 가정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은 지나친 가계 부담을 유발하여 개인의 ‘삶의 질’ 저하 초래
  - \* 양육비, 사교육비 증가는 중산층 가계의 주요 위협 요인

### □ 저출산과 노후 불안 야기

- 과다한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자녀 출산 욕구 저하
- 중장년층 학부모의 노후 준비를 위협하는 주요인

### □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사회통합 저해

- 계층간 소득격차에 의한 사교육비 차이는 학업성취 격차로 이어져 계층의 대물림 야기
  - ※ 계층간 사교육비 격차 → 학업성취 격차 → 고용·소득 격차 → 계층 대물림

### □ 공교육 부실화, 교육의 국제경쟁력 약화

- 사교육의 팽창으로 인한 공교육 약화, 공교육 부실로 인한 사교육 수요 증가 악순환 유발
- 주입식, 암기식, 문제풀이식 사교육은 학습에 대한 흥미, 학습력, 창의성을 저하시켜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 저해
  - 학업성취 수준은 세계 상위, 자기주도 학습능력, 흥미와 자신감은 최하위
  - 자기주도 학습력: 혼자 공부하기 불안 46% , 불가능 8%(교육개발원, '02년)
  - OECD PISA 2003 : 고1 학생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
  - OECD PISA 2006 : 고1 학생 읽기 1위, 수학 공동 3위, 과학 10위(전체 57개국)
  - \* PISA: 경제협력개발기구 주도 세계각국이 공동실시하는 고1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
  - TIMSS 2003 : 수학 2위, 과학 3위, 흥미와 자신감은 최하위 기록
  - TIMSS 2007: 수학공동3위, 과학4위, 그러나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 43위(49개국 중), 과학에 대한 자신감은 27위, 즐거움은 29위(29개국 중)
  - \* TIMSS :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 세계 50개국 대상 중2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 연구
- ※ 지나친 입시부담과 지식위주 교육의 문제는 사교육만이 아니라 공교육의 한계이기도 함
- ※ 과학 학업성취 하락은 대학전형에서 반영과목 축소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

### □ 학생의 정상적 발달 방해

- 심야까지 계속되는 사교육은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발달 저해
- 평생학습시대에 필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태도 형성 저해

### Ⅲ 최근 사교육비 증가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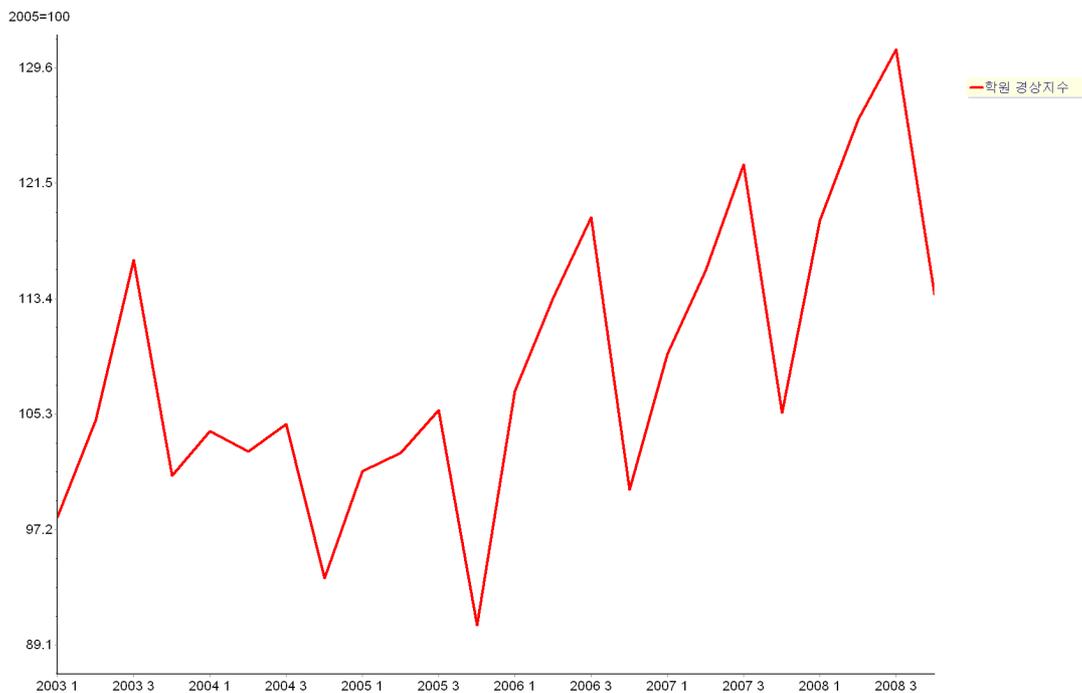
#### 1. 사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주장 비교

구분	평등주의		실용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쟁주의
	학벌타파주의 근본적 원리주의	내신강화주의 변형된 원리주의		
기본 관점	학벌경쟁수단으로서의 사교육 학벌 타파 관점	학벌경쟁수단으로서의 사교육 내신 중시 관점	사교육은 경쟁전략 점수경쟁 완화 사교육대체재 제공	사교육은 공교육 부실 결과 입시학력경쟁필요
사상적 배경	평등주의 지향	평등주의 지향 교육적 관점 교육자 중심	자유·평등의 조화 학습사회 구축추진 학습자·수요자 중심	자유주의 지향 경제학적 관점 수요자중심
주요 단체	학벌없는 사회 민노당 일부 급진 인사	전교조, 민교협 참교육학부모회 평등주의 지향 인사	일부 교육계 인사 *사교육실태·메카니즘 을 알고 있는 인사들	자유주의 지향성이 강한 일부 인사 (신자유주의)
사교육 수요증대 요인	학벌중심 사회구조 대학서열화	대학서열화 공교육과 무관한 수능·논술 전형	입시경쟁·내신경쟁 강화 학교교육 특성화 부족 학교와 교원의 교육력, 학생 학습력 부족	공교육 부실 평준화로 인한 획일교육
사교육 경감 대책	평준화 유지 대학평준화 사회 구조 혁신	내신비중 강화로 공교육강화 주장 평준화 유지 고교다양화 반대 교원평가, 학교경쟁 반대	공교육 내실화론 평준화 유지보완, 자율 학교와 고교특성화 확대 영어교육 내실화 학교경쟁 교원평가 주장	공교육 경쟁 강화론 평준화 해체, 전면보완 자사고·특목고 확대 영어로 영어수업 강화 교원평가, 학교경쟁
		방과후학교 소극 지지(교 과보충수업 반대), 전교 조: 수준별 보충수업 반 대, EBS 등 온라인학습 지원도 반대 실질적 대체재 없음	사교육대체재 적극 주장 (방과후학교 전면화, 수준 별보충수업 확대, 온라인, 온오프 블렌디드학습) 무료 온라인학습 유지 초·중 방과후학교 무상화	사교육대체재 제공 주장 (방과후학교, 수준별보충 수업 확대, 온라인학습 지원) 적극 대책 미흡, 온라인 학습 유료화 희망
입시 대책	대학평준화	대입·고입에서 내신 비중 강화 고교다양화 반대 자사고·특목고 반대	대입자율화(내신반영 비 중 자율화) 고교특성화로 고입점수 경쟁 완화	대입자율화 고입내신경쟁 영어능력시험 자사고·특목고 확대
결과	정책화 되지 않음	참여정부 수용 내신사교육 확대 죽음의 트라이앵글 초래	일부 제안 정책 반영, 사 교육비 지나친 증가 둔화	영어사교육, 고입경쟁사 교육 증가
평가	근본적 원인 분석은 타 당하나 현실적 점진적 대책 미흡 현실적 사교육 대책으로 는 적합하지 않음	학생간 내신경쟁 강화로 사교육비 증가 초래, 사교 육대체재 제공 부족으로 사교육 시장 확대 초래 학교·교원 교육력 강화 저해	현실적으로 타당한 관점 이지만 이념 대립으로 인해 확산 미흡 인식 부족과 정치적 세 력관계를 고려할 때 정 부 정책으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음	사교육 대체재는 제공하 나, 고입경쟁, 영어경쟁 강화로 사교육비 증대 우려 참여정부시기보다 사교 육비가 더 증가될 가능 성이 있음

## 2. 최근 사교육비 증가 실태 및 원인 분석

- 사회구조적인 원인 : 학벌주의 풍토, 평생교육 미비, 여성 사회 진출
  - 학벌주의 사회 풍토 : 능력보다는 출신 학교가 성공을 결정하는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로 인해 일류대학 입학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적 사교육 확산
  - 평생교육체제 미비 :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체제 미비로 학령기 일류대학 입시경쟁에 집중
  - 세계화·개방의 영향으로 영어교육 수요 지속적 증가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 자녀 보육을 위한 과외수요 증가, 초등 저학년 방과후 탁아를 위한 사교육 확산

□ 입학전형정책 측면 : 최근 4-5년 동안의 사교육비 증가 원인



[그림1] 서비스업 중 학원 경상수지 변동(한국은행, 2009)

- 학원경상수지(매출)가 내신비중 확대한 2006년부터 급격히 증가함

〈표1〉 '07 사교육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단위 : 개, 명, 억원, %)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2006	2007	증감률	2006	2007	증감률	2006	2007	증감률
일반 교과 학원	32,445	34,544	6.5	133,221	140,057	5.1	41,342	49,727	20.3
외국어학원	9,783	12,647	29.3	51,429	63,861	24.2	19,623	25,988	32.4
기타 일반 교습학원	380	393	3.4	2,959	3,630	22.7	1,866	2,486	33.3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3,041	4,121	35.5	15,180	18,237	20.1	6,444	8,184	27.0
방문교육학원(학습지 등)	3,649	3,232	-11.4	77,421	70,846	-8.5	30,408	28,238	-7.1

\* 자료 : 2007년 기준 서비스업부문 통계조사 결과(통계청, 2008)

- 2004년 수능중심 대입제도에서는 EBS인터넷수능방송을 통해 수능사교육 수요를 대체하여 사교육비 증가를 막았으나, 2006년 이후 참여정부가 대학입학전형과 특목고 입학전형에서 내신비중을 지나치게 확대하면서 내신사교육 수요가 대폭 증가
- 더욱이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 논술을 모두 대비해야 하는 3중 부담(‘죽음의 트라이앵글’)에 시달리게 됨
-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제도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의 상대적 서열격차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기에 성적경쟁의 체감도가 높아 학습부담과 사교육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함

□ 2007년과 2008년도에 사교육비가 증가한 주요 원인

〈표 2〉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단위 : %)

가계수지항목별	항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기타교육훈련비 (원)	전가구	10.8	7.6	34.5	9.6	8.7	3.4	4.7	14.3
	근로자가구	10.1	8.6	40.8	9	9.5	5.2	10.9	18.2
	- 사무직가구	9.8	2.9	40.4	12.8	7.7	5.5	10.9	23.3
	- 생산직가구	10.8	18	34.1	3.8	12.6	3.5	9.3	6.2
	근로자외가구	11.4	6.4	27.5	10.4	7.6	1	-4.4	7.6
	- 자영자가구	15.4	8.4	21.8	11.8	8.6	4.2	-2.1	10.2
	- 무직가구	-8.2	-9.4	68.2	0.7	10.7	-8.9	0.1	-0.2

※ 통계청 가계지출조사에 의하면 '08년 사교육비 증가율은 14.3%임

※ '07년 사교육비 증가율이 낮은 것은 항목조정 때문임(실제로는 '07년 교과학원매출액 증가는 20.3%, 외국어학원 매출액 증가는 32.3%임)

\* 항목조정: 학교운영비지원비 항목을 공교육비로 옮겨 증가율을 낮게 만들

- 영어·수학 사교육비 증가가 주요 원인. 특히, 영어는 초등학교 4·5·6학년부터 중 고생에 이르기까지, 수학은 중·고등학교 특히 일반계 고교생의 사교육비 증가 비율이 높습니다.
- 초·중학생 영어사교육 증가는 ‘영어몰입교육’ 논란, ‘영어로만 영어교육’ ‘영어 능력시험’ 도입 논란, 외교·국제중 입시 등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학교 영어교육은 미흡하고, 사교육 대체재는 부족하여 사교육 수요 증가
  - \* 영어능력시험 말하기·쓰기는 학교보다 학원(그룹·개인지도)이 훨씬 효과적임
  - \* 이는 수능 처음 도입 때 학생들이 학교보다 학원 찾은 이유와 동일함

▶ 영어 사교육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 우려·불안 요인

- ‘영어를 영어로만 수업’하면 내 아이가 낙오하지 않을까?
-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되면 내 자녀가 열반으로 가서 상처받지 않을까?
- 앞으로 영어수업시수가 많아지고, 말하기·쓰기까지 도입되면 대학입시에서 영어 비중이 커지지 않을까?
- 국가영어능력시험이 도입되면 학교보다 학원이 더 잘 대비하지 않을까?

▶ 영어공교육 강화가 사교육을 증대시키는 이유 : 영어공교육 강화 → 영어비중 증대, 영어 점수경쟁 강화 → 영어 사교육비 증대

- 영어로만 수업하는 영어수업시수 확대(초등), 모든 회화중심수업(학부모 오해 결합하여 모든 영어수업으로 인식) 영어로만 수업,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 학부모 불안과 사전 대비 욕구 자극
- 말하기·쓰기 보완, 영어로만 수업 → 영어 어학원, 전문학원에서 듣기에 추가하여 말하기·쓰기 사교육이 필수적으로 인식되는 상황 초래
- 국가 영어능력평가 시험 제도 도입 → 실용 영어는 현실적으로 학교보다 학원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 평가시험을 고1·2 때 패스 위해 사교육 의존
- 결과 : 초·중학생 영어 사교육 수요 증대, 유아 영어 사교육수요 확대 중. 특히, 영어 말하기·쓰기 도입으로 영어 사교육기간 증가 우려(비용 증가)

- 고교생 내신과외가 지방까지 점차 확산되고, 중학생들의 특목고 입시를 위한 주요 과목 내신(학교성적) 과외로 사교육비가 증가  
(이는 부동산 가격인상이 강남→서울→수도권→지방으로 확산되는 이치와 유사함)
- 특히, 특목고 입학전형에서 참여정부 이후 최근까지 전과목 내신 반영비중 확대 정책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2010학년도 서울지역 특목고 내신 실질반영비율

계열	학교명	전형 종류	전 체 모집인원	해당전형 모집인원	2010학년도					2009학년도	2008학년도
					총점	내신 점수	내신 최저점수	실질 반영점수	실질 반영률	실질 반영률	실질 반영률
외고	대원외고	일반전형	420	312	400	250	0	250	62.50%	50.00%	33.00%
	대일외고	일반전형	420	315	200	110	0	110	55.00%	45.00%	42.67%
	명덕외고	일반전형	420	307	400	300	80	220	55.00%	50.00%	31.50%
	서울외고	일반전형 1단계	350	120	240	140	0	140	58.33%	52.38%	51.43%
		일반전형 2단계		115	140	70	0	70	50.00%	35.48%	
	이화외고	일반전형	210	160	340	240	38	202	59.41%	41.18%	32.06%
	한영외고	일반전형	350	275	200	120	0	120	60.00%	45.00%	33.00%
소계			2170	1604				57.18%	45.58%	31.95%	
과학고	한성과학고	일반전형	140	70	215	170	0	170	79.07%	84.16%	85.00%
	세종과학고	일반전형	160	83	215	170	0	170	79.07%	80.95%	85.00%
	소계		300	153					80.00%	83.37%	85.00%
국제고	서울국제고	일반전형	150	75	340	290	0	290	85.29%	85.29%	82.86%

\* 출처: 한겨레신문(2009.2.15)

\* 2007. 3. 20 참여정부 사교육 대책에서 대학입학전형에서 내신실질 반영률을 '확대함'과 동시에 '특목고 진학 과열 사교육 차단'을 위해 특목고도 '내신 위주 선발'을 강력히 권장함.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비난을 차단하기 위해 특목고입학전형에서 '내신 비중을 크게 확대'하였는데 이것이 더욱 사교육비를 증대시키고 있음.

■ 각 과목별 학교내신 반영비율

(단위 : %)

구 분	주요 5개교과						기타 과목								전 체
	국	영	수	사	과	합계	도	기/가	음	미	체	선택1	선택2	합계	
한 영	18.6	18.6	23.3	11.6	11.6	83.7	2.3	2.3	2.3	2.3	2.3	2.3	2.3	16.3	100
대 일	32.5	2.5	42.5	2.5	2.5	82.5	2.5	2.5	2.5	2.5	2.5	2.5	2.5	17.5	100
대 원	19.4	19.4	19.4	9.7	9.7	77.4	3.2	3.2	3.2	3.2	3.2	3.2	3.2	22.6	100
서 울	12.5	16.7	16.7	12.5	12.5	70.8	4.2	4.2	4.2	4.2	4.2	4.2	4.2	29.2	100
명 덕	12.8	12.8	15.9	11.3	11.3	64.1	5.1	5.1	5.1	5.1	5.1	5.1	5.1	35.9	100
이 화	12.3	12.3	12.3	12.3	9.9	59.3	9.9	9.9	0.4	0.4	0.4	9.9	9.9	40.7	100
평균	18.2	13.9	21.0	10.1	9.7	72.8	4.6	4.6	3.0	3.0	3.0	4.6	4.6	27.2	100

\* 출처: 하늘교육

- 외국어고 입학전형 관련 사교육 증가 유발 관계
  - 내신 비중 전면 확대(외고 약 두 배 확대) ⇒ 전과목 내신 사교육 확대
  - 외고 수학·과학 가중치 확대 ⇒ 수학·과학 전문학원 사교육 확대 초래
  - 영어 듣기평가 및 면접 ⇒ 영어 전문학원 사교육 확대
- 이러한 특목고 입시구조에서는 고교서열화, 고교입시경쟁, 사교육 수요 증가, 중학교 교과지식 위주 교육이라는 파행을 극복하기 어려움
- 고교다양화300 중 자율형사립고 내신대비 사교육 수요 증가 우려
  - \* 교육적 영향 : 사교육비 증가만이 아니라 고교서열화, 고교입시경쟁 강화, 중학교교육 왜곡, 초중학생 성장 저해
  - \* 사회적 영향 : 교육을 통한 사회불평등 재생산 기제로 작용,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이 더욱 어려워짐

- 참여정부 이후 특목고 입학전형의 내신강화로 내신사교육 증가 → 내신중심 전형의 폐해에 대한 정부·교육계 인식전환 필요

### 3. 사교육비 증가 원인 종합 분석

- 대학·고교 입학전형 정책 : 입학경쟁 강화
  - 참여정부 내신 강화: 내신 강화로 인한 지속적인 사교육비 증가
  - 현정부 대입정책: 수능 문과수학 범위에 미적분 포함하여 사교육 증가, 다양한 잠재력 보유학생의 능력 개발 위축 우려
  - 현정부 고교체제 개편과 고입정책 : 특목고 내신강화, 고교다양화 300, 국제중 학교 정책의 영향 검토
  - 지속적인 영어교육 수요증가, 영어교육정책 잘못 추진 영향
    - 영어교육 수요 지속적 증가, 학교에서의 영어교육 경쟁력 미흡
    - 영어몰입교육 논란, 영어공교육완성 정책의 영향
    - 국제중학교 입학전형: 초등·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 증가
-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교육
  - 학습자·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 충족 미흡
  - 학생교육에 대한 교사 열의 부족과 있던 열의조차 꺾는 교원정책
  - 학교의 교수학습 개선 미흡 : 학교의 교육력 신장 노력 미흡, 방과후학교 확산·내실화 미흡, 일부 단체 수준별 보충수업 반대
- 학교의 사교육 대체재 제공 미흡
  - 방과후학교 확산 미흡 : 초등 저학년 탁아수요 충족 부족, 초중등 교과 수준별 보충수업 제공 미흡. 고교 학생 자율성 전제한 수준별 보충학습 제한 → 사교육비 경감 효과 미흡
  - EBS 수능강좌 서비스의 한계 노출 : 초·중학생 콘텐츠 부족, 특목고전형대비, 내신 대비 콘텐츠 부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학습관리 미흡, 콘텐츠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빈약
- 사교육 공급자의 과다 이윤 추구
  - 일부 학원·교습소의 불법·편법·고액 학원비 징수 사례 온존
  - 초중등교육 단계 온라인 사교육기관 수강료에 대한 합리적 관리·규제 부재
- 학생·학부모 의식·태도: 자기주도학습력 부족, 사교육 의존

-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력 부족 : 사교육의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원인
  - 학교교육과 온라인·오프라인 사교육 모두 교수자 중심의 교육제공에 그치고 학습자의 학습동기 부여, 학습목표 설정, 학습관리, 학습지원 미흡
- 학부모의 불안심리와 사교육 의존: 자기주도학습력 신장 소홀

## IV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방향

- 「중산층·서민의 학습복지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정책 목표
  - 학교 교육력 신장과 학습자 학습력 신장   ○ 사교육비 경감
  - 교육격차해소   ○ 일자리 창출   ○ 학습복지국가 실현
-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방향
  - 시급한 긴급필수대책과 중장기대책 구분 추진
  - 다양한 능력개발과 적격자 선발을 지원하는 입학전형 선진화 추진
  - 교원평가, 학교교육 다양화·특성화 정책 추진
  - 초·중학교 방과 후 영어무상교육, 돌봄, EBS
  - 소외계층 단계적 무상교육체제 도입
  - 전 생애 모든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력 신장, 학습복지 실현
  - 학벌주의 극복, 대학서열 유연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

### □ 사교육비 증가 원인별 대책

사교육 수요 증대 원인	⇒	원인별 대책	시기
사회구조적인 원인(학벌주의 등)	⇒	사회개혁 중장기 대책(학벌주의 극복 등) 추진	장기
대학·고교 입학경쟁 강화		대학입학전형 / 고교입학전형 선진화	단기
학교의 다양한 교육수요 미충족 학교 교육력 부족	⇒	교원평가로 학교 교육력 신장 예체능중점/영어특성화학교 등 학교교육 다양화	
사교육 대체재 미흡	⇒	사교육 대체재 확충(방과후 돌봄, 영어무상교육, EBS, 자기주도학습 관리 적극 지원)	
사교육 공급자 과다 이윤 추구		온·오프라인 사교육 공급자 합리적 관리	중기
자기주도 학습 태도·능력 부족 사교육 의존 심리	⇒	자기주도 학습 태도·능력 신장 사교육 의존 심리 극복 대책	
평생교육, 직업교육체제 미흡		개방형 평생교육, 고용친화적 직업교육체제 구축	

□ 정책 대상별 주요 과제

사교육비 경감 정책 대상		⇨	대상별 주요 정책 방향
영·유아, 부모		⇨	영·유아 보육·교육도달서비스 제공, 부모 지원
학령기 아동	자기주도학습력 있는 학생	⇨	EBS, IPTV 활용 u-학습지원서비스
	자기주도학습력 부족 학생		방과후학교(온라인 연계학습 포함)
	교육소외계층 아동		전면무상교육체제 도입
초중등 학교		⇨	학교교육 다양화·특성화, 학교 교육력·학습력 신장, 교육인프라 개선
영어교육 수요자			생애 단계별 영어u-학습지원, 영어교육국가책임 (초중등 영어무상교육)
과다 이윤 추구 사교육 공급자			온·오프라인 사교육 공급자 합리적 관리
취업준비 대학생 고등교육 희망 성인		⇨	고등교육 u-학습지원포털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학습계좌제
직업능력개발 희망 성인		⇨	직업교육 u-학습지원포털 고용친화적 직업교육체제 정비(경험학습 인증)

□ 패러다임 변화 지향(근본적인 해법) : 학령기 일방적 교육 공급(의존학습, 모방학습) → 전 생애에 걸친 자기주도 학습 지원·조장·촉진

구분	전통적 학교교육체제	개방형 평생학습체제
사회구분	■ 산업사회	■ 지식기반사회(유비쿼터스사회)
인간상	■ 상황 적응형 인간, 타율·수동·순응형 인간	■ 상황 주도형 인간, 자율·능동·창의적 인간
교육체제	■ 폐쇄적 교육체제 : 학교 외 학습 불인정 ■ 교육(공급)자 중심 체제 : 관료와 교원 주도	■ 개방적 교육체제 : 다양한 학습결과 인정 ■ 학습자·수요자 중심 교육체제: 국민이 주도
범위	■ [공간] 형식적 학교교육이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관할 ■ [시간] 학령기 아동 대상 교육(학교에서 교육종료)	■ [공간] 모든 영역에 걸친 학습 : 학교, 가정, 직장(일터), 지역, 인터넷(가상현실) ■ [시간]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의 일상화 : 기초교육 단계는 핵심역량, 자기주도학습 능력 증대
교육목표 교육내용	■ 목표: 교과지식의 신속한 전달·수용 ■ 고정적인 교육내용, 지식·정보의 전달 중시: 지식의 습득과 반복 중시 ■ 교과지식 중심 내용 편성	■ 목표: 자기주도적 창의적 학습자 육성 ■ 유동적 교육내용, 지식·정보의 창조·습득·적용 중시, 학습법 특히 자기주도학습법 습득 ■ 핵심능력(생애기초능력) 중심 내용 편성
지식관리	■ 교육자의 지식 독점, 제한적인 전달·유통	■ 학습자의 지식공유, 제한 없는 나눔과 유통
교육방법 학습방법	■ 교육공급자 주도형 - 교육자(교사) 수업(가르치기) 중심 ■ 학령기의 일제식(一齊式)·집체식 교육 ■ 제한된 학습방식 옵션: 오프라인학습 ■ 필요능력: 문해능력	■ 학습자 주도형 - 학습자 학습(배우기) 중심 ■ 적시 개별·맞춤형 교수·학습 ■ 다양한 학습방식옵션 : u-러닝, 블렌디드러닝 ■ 필요능력: 학습능력·의지, 정보활용능력·의지

구분	전통적 학교교육체제	개방형 평생학습체제
교육대상	■ 학령기 아동·청소년	■ 모든 사람(영아에서 어르신까지)
성인학습	■ 개인책임, 소비형 학습(장식품)	■ 사회적책임(공공성 인정), 생산적 복지형 학습
교육기반	■ 학교와 대학 ■ 형식적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 모든 기관 및 시설 ■ 테크놀로지가 지원하는 교육
학습결과 인증방식	■ 졸업장 및 학위(學歷·校歷중심사회) ■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미흡	■ 자격증, 학력인증제도 구비(능력중심사회) ■ 학교 밖 학습경험까지 인증 가능
교육관리	■ 국가 인정의 교육전문가 ■ 획일적이고 경직된 중앙통제형 관리	■ 학습자와 시민공동체 ■ 다양하고 유연한 분권형·자율형·지원형 관리
교육과 훈련 관계	■ 교육과 훈련의 분리 ■ 학교와 일터의 분리	■ 교육과 훈련의 연계 ■ 학교와 일터의 연계
교육재정	■ 인재 양성을 위한 비용으로 인식 ■ 소극적인 재정 투입	■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복지비용 투자 ■ 국가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투자 확대
교육주권	■ 국가 관료와 교원(교육자)의 권력 분점	■ 학부모·주민 등 모든 국민의 교육주권 실현

\* U-러닝 : 유비쿼터스 학습환경을 기반으로 시간·장소·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개별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학습 형태

\* 자료 : 안선희 외(2008), 사교육경감을 위한 학원관계법 정비 및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과 학기술부.

## V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7대긴급대책

### 1. 고교입학전형 선진화 : 특목고·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 개선

#### 가. 서울시교육청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

- 교과부 외국어고 입시 개선 방안
  - 주요 내용 : 지필고사 금지,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 금지, 수학·과학 가중치 합리화, 모니터링 강화 등
  - 결과 예측 : 내신 반영 과목과 비중 축소, 특히 수학과 과학 가중치 폐지가 없어 사교육 경감 효과는 없을 것. 학생의 다양한 적성·능력·흥미·진로를 반영하는 다양한 인재 육성도 여전히 어려움. 중상위권의 특목고 대비 사교육은 계속 증가 추정
- 교과부 과학고 입시 개선 방안
  - 주요 내용 : 경시대회·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 폐지, 입학사정관 전형 도입, 창의성과 잠재력 측정하는 과학창의성전형 등

- 결과 예측 : 현재 80% 내외에 달하는 전 과목 내신반영 비율을 줄이지 않는 이상 사교육비 경감은 어려움
- 자율형사립고 학생선발방식
  - 보도 내용 :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중학교 내신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들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 결과 예측 : 내신 상위 50~100%의 범위에서 응시 자격 기준을 정하면, 내신 50% 범위를 벗어나 있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증가. 특히, 진학 이후 내신 경쟁 강화로 인한 사교육비 상승 예상
- 종합적 결과 예측
  - 중상위권, 수도권 : 외고, 과고 입학전형 대비 사교육 수요 증가
  - 중하위권, 지방 :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대비 사교육 수요 증가
  - 중상류계층 자녀 : 외국어고,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대비 사교육 ⇒ 상위서열 고등학교 입학, 입학사정관전형 대비 스펙 갖추기 맞춤형 사교육·진학컨설팅 ⇒ 상위 서열 대학교 입학 ⇒ 학벌을 통한 사회적 지위 획득
  - 서민계층 자녀 : 사교육 수요 감당 어려움 ⇒ 중하위서열 고등학교 입학, 입학사정관전형 대비 어려움 ⇒ 중하위 서열 대학교 입학 ⇒ 사회적 집위 획득에서의 차별
  - 종합 : 성적 수준, 지역, 계층을 막론하고 사교육비 증가, 교육을 통한 계층간 대물림 확대, 계층간 위화감으로 사회 통합 저해 초래

## 나. 특목고·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 개선

- 특목고 입시에서 내신 반영을 대폭 제한
  - ‘특수분야의 전문교육’이라는 당초 설립 목적에 맞추어 해당 분야 교과 중심으로 선발
    - 내신 반영 대폭 제한 : 내신을 반영할 경우에는 외국어고는 외국어와 국어(또는 사회),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만 반영
      - \* 전과목 또는 주요 과목 반영이나 수학·과학 반영 금지
    - 시험 형태는 ‘지필 고사’를 제외하고 ‘영어 듣기, 심층 면접, 논술, 입학 사정관 등’ 학교장 자율로 선택
      - \* 영어듣기 평가는 동일 시도 내 외국어고 공동출제,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출제
    - 입시 혼란 예방을 위해 예고제 형태 도입 → 현재 중1부터 적용

- 과학고 경시대회 특별 전형을 폐지
-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 방식도 ‘국내 대회 수상자 위주 → 학교장 추천, 학회 심사 등’으로 개선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안〉

	현행	개선*
■ 외국어고	· 특별전형(정원의 37%) : 외국어, 지역 우수자 등  · 일반전형(정원의 63%) : 내신	· 내신 반영 대폭 제한 : 외국어와 국어(또는 사회) 반영방식 도입, 중학교 내신 전과목 반영 방식 금지, 특히 수학·과학 반영 금지  · 외국어 평가(듣기, 심층 면접 등)
■ 과학고	· 특별 전형(정원의 32%) : 경시대회 성적 또는 영재교육원 수료자  · 일반전형(정원의 68%) : 내신 및 구술 면접	· 내신 반영 대폭 제한 : 수학·과학만 반영, 전 과목 반영 방식 금지  · 수학 또는 과학 평가(심층 면접, 논술 등)

\* 지필 고사는 폐지

- 자율형 사립고는 ‘先지원 - 後추첨’ 방식으로 선발 (학생부 심사 또는 지원 자격 제한 등 금지)
  - 학교간 우수학생 선발 경쟁에 의한 사교육비 유발을 차단하고 학교간 교육 경쟁을 유도
- 공립 개방형자율학교, 기숙형자율학교 추가 지정운영(특목고 수요 분산)
  - 특성화교육을 실시하되, 선지원 후추첨 방식 선발 방식 도입

〈참고〉 고교 입시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 ◎ 특목고를 입시 최우수 학교에서 외국어·과학 등 특성화된 인재를 길러내는 특기 적성 학교로 개선 (특목고 제자리 찾아주기)
  - (현재) 외고는 전 과목 최우수 학생들로 구성, 입시 우수 학원화  
→ (향후) ‘외국어’ 외에는 일반 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

〈외국어고 위상 변화 예상〉

	현재	→	정상화
■영 어	최상위권		최상위권
■그 외	최상위권		평균

- 이 경우 입시와 관련한 특목고 자체의 매력도가 약화, 특목고 입학 을 위해 초등학교 때 부터 선행 학습을 하는 등의 조기 과열 입시 경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1) 외고를 위해 영어만 몰입할 경우 수학·국어 실력 약화되어 향후 대입에서 불리해질 가 능성. 게다가 현재 외고 경쟁률은 1/10 (입학 확률도 높지 않음) → 외고 입학 을 위해 영어만 몰입할 가능성 미약
  - 2) 영어만 잘하고 수학, 국어는 평범한 학생 비중이 높아질 경우 일류대 진학률도 대폭으 로 떨어질 것
- 일류대 진학을 하락 → 초·중 학부모의 선호도 감소 → 선행 학습 감소 → 사교육 감소 의 효과 기대
- ◎ 자율형사립고가 우수학생 ‘선발경쟁’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창의력을 길 러주는 ‘교육경쟁’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
- 자율형사립학교 학생선발방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

## 2. 대학입학전형 선진화 : 내신절대평가 도입, 내신비중 축소(또는 조정)

- 방향
  - 내신·수능 반영비율 등 입시 전형은 대학 자율을 유지하면서 내신과 수능 제도 를 개선
  - 현행 국어(언어)·수리(수학)·영어(외국어) 중심 교과목 반영으로 사교육비 증가, 대입선발의 타당성 약화, 다양한 분야의 재능 살리기와 다양한 분야 인재 육성 저해
- 내신 산출 및 반영 방법 개선
  - (내신) 고1 성적 내신 반영 배제 권장, 반영 비율은 대학 자율 유지 (→ 중3~고1 부터 입시가 조기 과열되는 것을 완화)
  - (‘희망의 트라이앵글’ 권장) 정시에서 내신, 수능, 논술을 함께 반영하는 총점 위주 전형(‘죽음의 트라이앵글’)을 지양하고, 수시는 내신 중심 전형과 논술 중 심 전형, 정시는 수능 중심 전형 권장
    - 학생들은 각자 자신 있는 전형요소를 활용하여 대학 진학 가능
    - 내신이 불리하더라도 수능이나 논술로 진학 가능하도록 유도
    - 대학에 고교 학년별 내신 반영 비율 결정 자율권 부여, 고교 3학년 내신만으로 도 대학 진학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고교 2·3학년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패자 부활 기회 부여

- (내신 절대평가 도입)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평가로 개선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로 부풀리기 견제

◆ 내신 제도 자체를 절대평가로 개선하는 방안 적극 검토

- ◇ 현행 상대 평가방식은 ‘획일적 9등급 서열 매기기’
  - 학교간 평가 곤란(고교 등급제 유발), 학교간 경쟁 유인 약화, 학급 내 경쟁 유발 등 다양한 부작용, 공교육 내실화 효과는 미약
- ◇ 절대 평가방식(본래 목적에 적합한 학업 성취도 측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
  - [부풀리기 방지 방안] 고2부터 난이도가 높지 않은(기본 학력 측정 수준)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하여 보완, 또는 학교별 내신 분포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부풀리기 경향 견제
- ◇ 절대 평가내신이 자리 잡도록 도울 수 있는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추진 → 교과교실제, 학교 시험 방식 다양화(토론 평가, 실기 등)

※ 한국교총 설문조사(2009.5): 가장 시급한 사교육대책은 내신절대평가 전환 및 내신 반영비율 축소(교원 37.85)

□ 수능 출제 및 반영 방법 개선

- (수능·내신) 모집단위별 반영 과목과 반영 비율을 차별화로 모집단위별 전형 특성화 정착 유도
  - 예체능계는 영어·수학, 인문사회계는 수학, 자연계는 영어의 반영 비중을 축소 권장 → 수학·영어에 대한 과열 사교육 차단(실질적인 수능 과목 축소 효과)
  - \* 영어의 난이도는 현행 유지, 자연계 수학은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제고(수학 사교육비는 이미 최대치, 추가 상승 우려 미약)
  - 수능출제 개선 : 고교 수준 고급사고력 측정 중시
  - 문과수학 범위 재조정 : 상경계열·통계전공자만 수리가형 선택 요구
  - \* 수리 나형을 분리하여 수리‘나’형(사회계열과 인문계열)과 ‘다’형(상경계열, 미적분 포함)으로 분리하여 출제하는 방안 검토
- 사회탐구·과학탐구는 ‘4과목 응시, 2과목 성적 제출방식’에서 → ‘2과목 응시, 2과목 성적 제출방식’으로 간소화
- 수능의 시험횟수 확대, 출제 방식 등 개선 추진

□ 입학사정관전형 개선

- 입학사정관제·논술 등 정성적 대학 자율 선발 방식의 합리적 정착 지원 : 입학사정관제 단계별 추진, 공정성·신뢰성 제고조치 병행
- 입학사정관제는 소수자 배려를 위한 특별 전형에 우선 적용(사회적 배려, 지역

- 균형 등)
  - 입학사정관제 관련 신중사교육과 부정입학 방지→계층대물림 방지
  - 입학사정관제도 정보제공, 대입온라인컨설팅 등 대입포털 구축
- 빈곤의 대물림 방지 위한 적극적인 차별정책 도입 등
  - 지역균형선발, 사회균형선발 등 비율 확대
  - 교과목 축소(교육과정 개편)를 중장기 추진

〈대학입시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현 재	개선방안
3년 내내 사교육	→ 기간 단축
전과목 사교육	→ 진로와 관련된 과목만 사교육
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전형 특성화	→ 대입 적격자 선발 고교교육 다양화·특성화 고교교육(대입준비)-대학수학 연계

3. 학원교습시간 제한으로 사교육 공급·수요 축소

- 청소년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

	현 행 (사도 조례로 제한)	개 선 (학원법 개정)
■ 초등학생	· 서울·부산·인천 22시까지 · 대구·광주·울산 24시	· 1안) 21시까지로 전국 단일화 · 2안) 22시까지로 전국 단일화 * 필요시 초등학생만 21시까지로 제한
■ 중학생	· 서울·부산·인천 22시 · 대전·경기·충북·전북·경북 24시 · 기타 23시	
■ 고등학생	· 서울 22시, 부산 23시 · 그 외 24시	

☞ 전국의 학원 산업을 선도하는 BIG-3 지역(대치동, 목동, 중계동) 영업 시간 제한이 병행되어야 사교육비 억제 가능

- 고액 불법 학원비 규제 강화
  - 학원비 공개 :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비 공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학생·학부모의 선택을 돕고 부당 학원비 징수 모니터링 강화
  - 탈법행위 단속강화 : 불법·고액 학원비 징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학부모 등의 신고포상제도 도입

-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1회 위반시 교습 정지, 등록 말소(One-strike 제도)
  - ※ 학원비 공개와 현금 영수증 발급 등에 대한 학원법 개정 추진중(규제심사중)
  - 현행법이 구체적 절차나 기준 없이 각 시도별로 지도, 감독, 행정처분, 과태료 기준 등을 상이하게 운영하는 것을 통일시키라는 취지
- (온라인 사교육기관) 유·초·중등교육 단계 온라인 사교육기관의 강사 및 수강료에 대한 공적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온라인 사교육기관은 학원이 아닌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수강료 등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 ※ 박종희 의원 대표발의('09.3.24)로 학원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 4. 교원평가 제도화로 학교교육력 신장

- (교원평가) 교원평가를 조속히 도입하여 교육의 질 제고와 맞춤형 교육에 대한 학교·교원 단위의 노력 유도
  -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조속히 제도화하여 학생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단 풍토 조성
  - 학생교육 우수교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 ※ 교원평가는 학습자·수요자의 요구와 만족도를 반영하는 제도로서 교사의 교수학습 개선과 학생평가방식 개선, 학교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여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줄일 것임
- (부적격교원 대책 내실화) 부적격 교원 대책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수업 능력이 부족한 교사의 경우 지속적인 연수·학습을 통한 수업개선 기회 제공
  - ※ 교원평가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 ※ 우수교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부적격 교원 대책 개선, 무능교사 대책은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학교풍토를 조성할 것임

#### 5. 예체능 특성화학교( '예체능교과중점학교' ) 확대

- 권역별로 예체능 특성화 학교를 지정하여 예체능 계열 진학 희망자의 사교육 수요 흡수
- 예·체능 포함 일반 중·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설치·운영 확대 : 예·체능 특성화 교육과정 외에도 학교별로 외국어(영어)특성화교육, 과학(또는 수학)특성화교육 등 다양한 특성화교육과정 확대

※ 2009학년도 예체능계열 대학입학정원은 전체의 12.1%, 2008년 서울시 중2학년 예체능계열 희망자 비율은 31.1%이지만, 극히 일부 학생 외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 예체능교육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음

- 학군별로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수요 조사하여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학교의 비율 조정

## 6. 방과 후 영어무상교육 추진, 자기주도학습 지원

- (방과후학교 단계적인 영어무상교육) 초·중학생 대상 방과 후 영어교육을 단계적 무상화 추진

### [전면적인 영어 무상공교육(무상방과후교육) 추진]

- 초·중학교 영어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전액 무상 지원
- 전일제·시간제 영어 전용교사 확대 고용을 통하여 일자리 확대
- EBS에 초·중·고등학생 대상 u-학습체제 내실화 및 무상 지원
- 대학생, 직장인을 위한 영어 u-학습체제 구축 및 무상 지원
- 영어 교사의 교육력과 학생의 영어 학습력 신장 병행 추진
- 영어격차 해소 대책 별도 추진

- (방과후 학교 운영 개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 제고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
  - 학교가 운영주체가 되어 일부 프로그램의 민간위탁과 전문컨설팅 시스템 도입을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 제고
    - \* 민간위탁 운영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교육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 방과후학교 운영·관리매뉴얼 개발·보급 : 강사 자격·임용·관리, 수강료·교재비 기준, 학습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절차, 수요자 만족도조사, 재정운영 효율화·투명화, 각종 폐해 발생 시 책임소재 등 명시
  - 수준별 강좌 개설, 강사간 경쟁체제 도입
  - 방과후학교 관련 교사 업무부담 경감 및 지원 방안 적극 마련
- 방과후 활동 + 가정 돌봄의 기능을 야간(21시)까지 제공하는 “종일 돌봄 교실”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사교육비 경감
  - EBS(초중학교 포함), IPTV 등 첨단 매체를 활용하여 우수 프로그램 제공 및 강사 부족 문제 해결

- 중산층까지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차등 지원하여 참여율을 확대
  - 소득 하위 80%까지 차등 지원하여 현재 45% 정도인 초·중학생참여 비율을 75% 수준까지 확대, 사교육 기반 축소
- 방과 후 자기주도학습 지원·관리 체제 구축, 학습튜터 양성·활용
  - 초등은 부모 퇴근시간, 중·고교는 자기주도학습을 원하는 학생에 대해 10시까지 학습실 제공, 학습지원·관리, 방법, 급식까지 학교에서 지원
  - 자기주도학습 지도, 진학컨설팅 가능한 체제 구축, 튜터 양성·임용

## 7. EBSi 초·중학생 학습지원 전면 확충, 특목고·우수고 현장수업 동영상 제공

- 패러다임 전환 : ‘교육에서 학습으로’
  - 단순 ‘교육콘텐츠 공급’에서 ‘학습자 학습관리·지원’으로
  - ‘재미없고 짜증나는 수업’에서 ‘재미있고 즐거운 맞춤형 학습’으로
  - ‘교과지식 중심’에서 ‘사고력·창의력 중심’으로, 나아가 ‘특기적성과 학습법, 취미·여가생활까지’ 종합적인 학습지원, 정보제공, 놀이지원 추진
-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습지원포털 확충
  - 현황 : 현재 EBS는 고교생 수능강좌 위주 운영, 초·중학생 이용률 저조, EBSi 수능 중심, 일부 논술·내신 대비 콘텐츠 제공, 경쟁력·효과 저하
  - 개선 방안
    - 초·중학생을 위한 별도사이트 구축, 교수학습콘텐츠 대폭 확충
      - \* 특히, 중학교 내신강좌, 자사고·특목고 입학전형 대비 콘텐츠,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법 등
    - 고교생 대상 EBSi 개선·확충, 내신·논술강좌 확충
    - 과목별 교·강사 10명이상 확보, 다양한 수준·특성의 콘텐츠 제공, 학습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질 관리 시스템 도입
    - 스튜디오 수업만이 아니라 학교 BEST현장강의 제공(초·중·고 일반학교 우수강의, 국제중, 과학고·외고 등 우수교사 현장강의 제공)
    - 단순 강의설명이 아니라 사고력 위주 토론, 실험, 탐구 중심 콘텐츠 제공
    - 주제별·난이도별 콘텐츠 분할 제공, 정규수업·보충학습시 이용 촉진
    - 수요자 중심 학습지원서비스 제공 : 교육만이 아니라 학습관리·학습평가·진단 서비스와 각종 검사·상담서비스, 진로·진학 컨설팅 제공
- 영어교육 포털 콘텐츠 및 학습관리 서비스 확충, 전면 무상제공
  - 개선방안 : 유아, 초등, 중등, 교사, 대학생·일반인 등 대상별 영어 실용교육 콘

- 텐츠 확충, 영어집중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인터넷과 IP-TV, 전화 등을 활용한 교육효과 제고, 대부분 콘텐츠 무료제공
- (u-러닝 지원) 방과 후에 IPTV 또는 PC를 활용하여 EBS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연계학습 공간·기회 제공
  - 영어·수학 맞춤형 동영상콘텐츠 우선 확충·제공
  - 주요 교과 온라인 학습 관리·지원·처방 프로그램과 서비스 무상 제공

## VI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

### 1. 공교육 내실화 대책 : 교육과정 특성화, 교수학습평가 개선

- 학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
  - 다양한 학교 설립과 전환을 통한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 수용
  - 학교별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지원·촉진
    -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특색살리기 사업 적극 추진
    - \* 다만, 중학교는 국민공통교육과정 단계이기에 특색의 범위 제한
  - 특히, 일반계고교 예체능과정 개설 확대, 교육 내실화 추진
  - 선지원 후추첨 배정을 통한 학교 선택권 확대
  - 학교교육 다양화·특성화 지원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 권한 확대
-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 목적 : 미래사회 필요한 핵심역량 교육, 다양한 학교·교육과정 유도
  - 추진방안
    - 1단계 : '09년, 단위학교 '과정' 설치 등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 추진
    - \* 다양한 '특성화과정' 편성 허용·권장 및 수업시수 운영 자율화, 교과교실제 점진 확대
    - 2단계 : 핵심역량 중심 미래 선진형 교육과정 개편 추진
    - \* 다양한 연구·논의 거쳐 시안 마련 후 교육과정심의기구 심의 진행
- 교수방법 개선 :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
  - 토론학습, 탐구학습, 문제해결학습, 실험학습, 프로젝트학습, 협동학습, 온라인 연계학습 등 창의력 신장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 도입·적용
  - 교수법 개선을 위한 교원연수 지원 확대
  - 학교현장수업 우수사례 발굴, 온라인을 통해 전 교사·학생에게 제공

- 교사 학습관리능력 신장, 학습법 지도 강화, 학습관리 책무성 강화
  - 학습관리 중시 : 단순한 교수법 개선이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동기 찾기, 학습목표관리, 학습실행관리, 평가(진단·형성) 및 처방을 위한 노력 등 학습자를 위한 자기주도학습력 신장·지원에 중점을 두어 교육
  - 교사 학습관리 책무성 강화 : 주요 교과 학습진단, 학습관리 프로그램·매뉴얼 개발·보급·활용, 교과별 특화된 학습법 개발·보급·지도 등
- 평가·기록 방법 개선 : 평가 공정성·신뢰도 제고, 입학사정관제 지원
  - 교사 수행평가 방법 개선, 고급사고력 위주로 중간·기말고사 개선
  - 창의력 포함 종합적 사고력 중심으로 국가수준 평가(학업성취도 및 진단평가) 방법 개선, 국가의 학습부진 해결, 형평성 제고 노력 강화
  -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대응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개선방안 수립

## 2. 교육격차 해소, 학습복지 실현 대책

- 영·유아 교육 공교육화 등
  - 영유아교육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여 적극 지원 추진
  - 만 3-5세 유아의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지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 현황: 중학교 졸업생의 98%가 고교 진학, 고교 졸업생의 84%가 대학진학
  -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화 추세를 반영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 초·중학교의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 확대
- 초·중학교 방과후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 초·중학교는 무상의무교육 단계로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무상공급 추진 필요
  - 국가 재정을 고려하여 영어무상교육부터 점진적으로 무상화 추진
-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의 내실 있는 운영, 실질적 지원 확대
  - 이를 위한 교원, 교육과정, 교재, 온라인 콘텐츠와 프로그램 제공
- 교육소외학생 지원 확대
  - 장애 학생 교육권 강화, 통합교육 실시를 위한 보조교사제 도입

- 농산어촌 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 확대

### 3. u-학습 지원체제 구축

- 유아학부모 학습포탈: 유아만이 아니라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와 유아교육에 필요한 모든 보육정보, 교육·학습자료, 정보·지식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하여 모든 부모들에게 무료 학습지원 서비스
- 고등교육 학습포탈: 방통대·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주요 교육콘텐츠를 최고 수준의 동영상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 개방
- 직업교육 학습포탈 : 협력계약을 통해 국공립기관(민간교육기관 포함)이 지원하는 직업교육프로그램 중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프로그램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무료 제공

### 4. 고용 친화적 평생교육·직업교육시스템 구축

- 초·중등단계 직업 및 진로 교육 다양화·강화
  - 전 생애에 걸쳐 직업의 세계와 학교간의 매칭정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들을 위한 직업 및 진로 교육 내실화
    - 중학교 단계 전문계학교 설립, 마이스터고·직업교육대학 연계 추진
  - 학교 교육과정에 재미있는 진로교육, 직업체험교육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 직업탐색기회 제공
  - 표준화된 진로지도 매뉴얼 개발 및 진로 지도사 양성 등을 통해 학생별 ‘1:1 맞춤형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 교사·학생·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로 정보망 구축
  - 창의적 생애직업설계능력 함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서비스 지원
- 대학진학 없이도 전문직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 구축
  - 전문계고 교육과정을 취업 친화적으로 개편
    - 마이스터고, 특성화 전문계고 등을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집중 육성
    - 창업·비즈니스교육 강화 및 해외 명문 직업학교와 연계코스 운영
  -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학생들이 소질·적성에 맞는 직업교육 경로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위탁 프로그램’ 활성화
    - ※ 직업학교, 전문계고, 노동부 직업학교, 기술계 학원 등 적극 활용
  - 우수 직업교육기관을 ‘명문 직업아카데미’로 육성: 요리, 예술, 패션·디자인, 애

니메이션 등 유망 분야를 중점 육성

-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전문가로 성장하는 직업경로 구축
  - 전문계고-전문대학-산업체간 ‘산학협력 취업 약정제’ 사업 추진
  - 사내대학, 계약학과,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사이버 대학 등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
  - 평생학습계좌제, 경험학습인증제 시행으로 학습과정·학습결과 인정·활용
  
- 대학의 산업기여도, 평생교육 기여도 강화 : 고등교육체제의 혁신
  - 평생학습중심대학, 직업교육·산학협력 우수대학 지원 확대·강화
    - 지역 대학(또는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파트너십 형성하여 공동 추진
  - 정규학위과정으로 성인대학 도입, 지역주민대학으로서의 기능 강화
  -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숙련불일치조사, 분야별 직무능력시험 도입 등을 통하여 교육과정 현장성 강화, 직업기초역량 함양 강화
  - 해외 노동시장 진출 지원 체제 구축

## 5. 교육재정의 확충

- 교육세법 폐지법안 재검토
  - 현재 경기변동,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교육재정 불안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교육세법 폐지 법안 철회
  
- 중장기 교육재정 확충 방안 수립
  - 중장기 교육개혁 전략 수립 후 소요 예산 추정하여 범정부적 합의 도출 필요

## VII 기대 효과

- 사교육비 경감
  - 현실적인 목표 : 연간 사교육비 증가율을 연간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추는 것 → 나아가 현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춤
  
- 교육격차 해소, 빈곤의 대물림 극복
  - 기초학력 부진 해소 : '09년 진단평가 결과보다 50% 이하로 축소

-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학업성취 격차를 해소하여 계층간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확대
- 교육을 통한 사회 통합과 균형 발전 기여
  
- 학교 교육개혁 지원·촉진
  - 학교 교육력과 학생 학습력 신장을 통한 학교 교육개혁 지원
  - 정규교육과정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방과후학교 교육과 u-학습 서비스를 통한 학교 개혁 촉진
  - 지역사회를 향해 열린 학교로의 변화 기대
  
- 일자리 창출(사회적 고용 증진)
  - 학교 정규교육과정 일자리 창출 : 행정·회계보조인력, 전산·실험 보조인력 확충, 전문상담교사, 보조교사(수준별수업 보조, 학습관리 등)
  - 방과후학교 지도강사 일자리 창출 : 교과·특기적성 지도강사, 학습관리교사, 관리자(외부 초빙시), 방법·미화(청소) 등
  
- u-학습국가체제 기반 구축, 전 생애 학습복지 실현
  - 학습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개별 맞춤형 학습(u-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u-학습체제 기반 구축
  - 고교 졸업 시기 일류대 입학 과다경쟁 방지

## [별첨자료] 내신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그리고 사교육

### 가. 상대평가는 어떤 부작용이 있고 절대평가는 무엇입니까?

〈규준, 준거, 능력, 성장참조평가 비교(성태제, 2005)〉

내용/구분	상대비교평가 (규준참조)	절대평가 (준거참조)	능력참조평가	성장참조평가
강조점	상대적인 서열	특정영역의 성취	최대능력 발휘	능력의 변화
교육신념	개인차 인정	완전학습	개별학습	개별학습
비교대상	개인과 개인	준거와 수행	수행정도와 소유능력	성장, 변화의 정도
개인차	극대화	극대화하지 않으려고 함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이용도	분류, 선별, 배치 행정적 기능 강조	자격부여 교수적 기능 강조	최대능력발휘 교수적 기능 강조	학습 향상 교수적 기능 강조

- 현재 내신9등급제 상대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그가 속해 있는 집단 내의 상대적인 서열에 의해 판단하는 평가입니다(규준참조평가). 상대평가 도입 배경은 고교내신 부풀리기가 매우 심하여 내신의 신뢰도가 약화되는 문제를 극복하여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대입전형에서 내신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상대평가는 비교육적 경쟁과 이기심 조장, 학습부담 증가, 암기교육 조장, 학교간 교육경쟁과 교육특성화 노력 약화, 내신 사교육 조장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또, 상대평가는 철저한 양적 평가이기에 질적 평가 중심인 입학사정관제도와 충돌하여 고교등급제 논란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 ※ 현재 학생부 교과내신성적 표기는 교과목별로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병기) + 석차등급제(9등급제)’로 하고 있음
- 절대평가는 교수목표를 반영한 평가준거에 비추어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성적을 표현하는 평가입니다.
- 절대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목표·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고, 탐구정신과 협동정신을 함양하며, 서열 의식보다 지적 성취를 중시하여 불안감이 아니라 자신감을 줍니다. 또한 절대평가는 질적 평가를 위주로 하므로 고교등급제 논란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나. 내신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듭니까?

상대평가는 내신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지만, 절대평가는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절대평가는 학생간 서열등급 경쟁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높은 것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의 영향도 있지만 학교 내 상대적 서열 경쟁으로 인한 면도 큼니다. 일반학교에서도 서열이 9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학생간 서열 경쟁에서 이겨야만’ ‘남보다 내가 잘해야만’ 대학진학에 유리하기에 사교육 수요를 증대시키지만, 절대평가로 바뀌면 상대적 서열이 학습목표 달성 자체를 중시하여 학교공부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내신 점수·등급 경쟁과 그에 따른 사교육 수요가 줄어듭니다.
- 둘째, 절대평가는 지식암기 수업보다 탐구학습, 협동학습, 토론학습 등을 중시하기에 단기 암기식 사교육으로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암기위주 교육보다 교사의 수업과 학습과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중·고등학생 시절에 학생의 학습력, 학습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고갈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학생이 사교육을 받아도 사교육의 양상이 지식암기 위주가 아니라 사고력 위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 셋째, 절대평가로 바뀌면 학교시험의 난이도가 적정화되기에 내신서열등급을 나누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시험난이도를 올린 학교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아져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로 인한 사교육 수요도 줄일 수 있습니다.
- 넷째, 절대평가 제도와 대입제도 개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즉, 내신 상대평가로 인한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고, 또 고3 시기 내신만 반영하거나 수능 또는 논술 위주 전형의 경우 내신상대평가로 인한 부담은 더욱 감소하고 사교육기간도 짧아져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다. 내신 절대평가로 바꾸면 성적 부풀리기가 재발하지 않을까요?

- 학교와 교사, 학부모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절대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한 평가준거와 평가문항을 활용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또는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학교 내신의 신뢰도를 검토·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또는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의 학교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서도 그 결과 검토와 장학지도를 통해 학교 내신에 대한 신뢰도 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역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또는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의 과목별 학교 평균 점수 결과에 비추어 학교내신의 신뢰도를 점검·개선하여 좀 더 객관성 있는(신뢰도가 높은) 수준의 평가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미

국의 사례와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 학생의 수능모의고사(또는 예비수능) 성취도(등급)를 학생부에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 교사도 학교에서 자신의 학생평가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또는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의 과목점수를 고려하여 내신의 신뢰도를 점검·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사전 공개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공정한 평가를 수행한다면, 내신의 공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사별로 평가실명제(학생부에 기재)를 실시하여 평가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 대학은 개별 학교와 교사의 교육개선 노력, 학교의 내신절대평가 결과와 학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또는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성취도 결과 그리고 학생의 다양한 학습활동과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적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적 부풀리기로 판단되면 대학이 해당학교 내신을 신뢰하지 않기에 학교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 절대평가로 수·우·미·양·가(표기방법 개선 필요) 성취도 표기를 한다고 해도 석차/재적수를 병기하여 상대평가를 원하는 대학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도 있음

**라. 절대평가를 실시하면 특목고가 더 유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내신이 무력화 되는 것은 아닙니까?**

- 특정학교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전과목 우수학생을 뽑는 특목고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학생선발 방법을 개선하여 특수목적에 맞는 학교로 바꾸면, 특목고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율형사립고도 마찬가지로 절대평가에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어느 학교에 속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와 자신의 노력을 통해 학업성취를 달성한 것 자체를 중시하기에 결코 특정 학교에만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 현재, 정시모집에서 내신의 반영비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고, 또 입학사정관전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신을 중시하는 전형이기에 대입에서 내신이 결코 무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주장은 지난 수 년 동안 이루어진 학교와 교사의 노력을 너무 폄하하는 것입니다.

**▶ 내신 사교육이 줄면, 수능 사교육이 또 증가하지 않을까요? 수능에서 계층간 격차는 더 크지 않을까요?**

- ☞ 수학·영어 수요가 줄기에 수능 사교육비가 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능은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시험이기에 EBS u-러닝을 대폭 확대하고, 방과후학교에서 온라인연계학습 등으로 맞춤형 학습지원을 하면 수능 사교육비는 반드시 줄일 수 있습니다.

☞ 과거 EBS u-러닝이 확대되기 전,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사교육이 수능에 집중되어 수능점수에서의 계층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EBS u-러닝이 확대되었고, 일반학교의 수능 대비 능력이 신장되면서, 수능에서의 계층간 격차는 줄어들 것입니다. 심지어 입학사정관전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일반교사·학생들까지도 수능점수 외에는 기댈 언덕이 없다고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종합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 도입한 수능과 논술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편견을 다시 검토하며 이를 발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별첨자료2] 사교육 관련 정책의 변천 과정

입시 사교육 대책 추진기	
○ 1968. 7. 15	중학교 무시험 입학 정책
○ 1973. 2. 28	고교 평준화 정책
사교육 금지 시기	
○ 1980. 7. 30	교육개혁조치 단행 과외 전면금지 및 보충수업 폐지
○ 1980. 8. 7	과외 단속지침 시행, 일체 과외수업 금지, 졸업생에 한해 사설학원수강 허용
○ 1980. 8. 27	학교 내 예체능 집단실기지도 허용
○ 1981. 4. 13	과외교습제한, 학습지, 고사지, 녹화테이프판매 금지
사교육 금지 조치의 변경보완 시기	
○ 1981. 7. 14	예체능계, 기술·기능계, 응변, 꽃꽂이에 한해 재학생 학원수강 허용 어학계, 고시계, 인가학원 대학생 수강 허용
○ 1983. 8. 12	학습부진학생(하위 5%)보충수업 허용
○ 1984. 1. 6	고교 3학년 겨울방학중 사설외국어 학원수강 허용
○ 1984. 4. 10	초·중·고교생에 한해 일정기간 학원수강 허용
○ 1989. 6. 16	대학생의 초·중등학생에 대한 과외교습 허용
○ 1989. 6. 22	초·중·고교생의 여름방학기간 중 학원수강 허용
○ 1991. 7. 22	초·중·고교생의 학기중 학원수강 허용
○ 1995. 8. 4	대학원생의 초·중등학생에 대한 과외교습 허용
○ 1996. 12. 29	불법 과외대책 마련(교내 과외활성화,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
○ 1997. 7. 31	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대책 발표
○ 1997. 8. 25	위성교육방송 실시
사교육 전면 허용 시기	
○ 2000. 4. 27	과외교육 전면 허용(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 2001. 4. 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
○ 2001. 7. 8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 실시
적극적 사교육 대책 수립 시기	
○ 2004. 2. 17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EBS 인터넷방송,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 수요 공교육 체제 내 흡수, 학교교육 내실화 등) 발표
○ 2004. 10. 28	내신 비중을 확대하는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발표
○ 2007. 3. 20	사교육 의존도 완화 방안(공교육 내실화, 사교육 수요 공교육 흡수) 발표
○ 2008. 3. 20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고교다양화 300, 영어공교육 완성 등) 대책

[별첨자료3] 대입제도 시기별 변천 내용

학년도 (존속기간)	개정의 의도	내용	문제점	정치변동
'45~'53 (9년)		대학별입학시험(자율)	부정입학 문제	이승만정부
'54	학사부조리 예방	대학입학연합고사 + 대학별 본고사	연합고사 결과 백지화 이중 부담	
'55~'61 (7년)	실패한 연합고사 시정 대학자율	대학별 본고사 + 내신(권장)	학사부조리, 대학간 격차, 입시위주 교육	
'62	학사부조리 예방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	성적우수자 탈락 비인기대학 등 정원이탈	'61 5·16군사정변 대학입시에 대한 국가개입 공식화
'63	학사부조리 예방 교육의 효율성 대학자율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 + 대학별 본고사	대학(학과)간 극심한 학력차	
'64~'68 (5년)	실패한 국가고사 시정 대학자율	대학별 고사	학사부조리, 일류대 집중, 입시위주교육	'63 박정희정부
'69~'72 (4년)	교육의 효율성 학사부조리 제거	대학입학예비고사(자격시험) + 대학별 본고사	입시의 이중부담, 과열과외	'67 박정희재선
'73~'80 (8년)	자격시험 부작용 시정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예비고사(합격선 상존) + 본고사 + 내신	입시의 이중부담, 과열과외	'72 유신체제
'81	과열과외 해소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예비고사(선시험) + 내신 *졸업정원제	대학의 선발기능 약화	'79 12·12사태 '80 전두환정부 7·30교육개혁
'82~'85 (4년)	예비고사 개선 (선발의 타당도 제고) 무의미한 합격선 폐지	대학입학학력고사 + 내신 *졸업정원제	입시혼란 적성무시 지원 지식 중심 교육	
'86~'87 (2년)	내신의 문제점 보완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학력고사 + 내신 + 논술	대학의 선발기능 약화, 편중지원·미달, 논술 미흡, 지식 중심 교육	
'88~'93 (6년)	선시험 부작용 시정 논술의 문제점 개선	대학입학학력고사(선지원) + 내신 + 면접	대학의 선발기능 미흡, 면접의 기능 미흡	'88 노태우정부 '91 수능도입확정
'94~'96	학력고사 개선 대학자율	대학수학능력시험 + 내신 + 본고사	과열과외, 수능과 본고사 중복	'93 김영삼정부 '95 5·31교육개혁
'97~'01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 학교생활기록부 + 논술	학생부 반영 비중 미흡 사교육 과열	
'02~'07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 학교생활기록부 + 논술 + 추천서 + 심층면접 등	학생부 반영 비중 미흡 사교육 과열	'98 김대중정부 '98 2002대입제도
'08 (*04. 10월 발표)	내신 비중 확대,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학생부 비중 확대 +수능개선 +선발 특성화·전문화 +사회통합유도 전형 확대	내신 사교육비 증가 학생 3중부담, 내신경쟁 심화, 패자부활 불가능	'03년 노무현정부 '04 2008대입제도
'09	대입자율화	수능등급제 폐지 입학사정관제 확대 ' 12 대입완전자율화 대입업무 대교협 이관 * 09, 입학사정관제 확산	대교협 자율능력 우려 모집단위별 특성화 미흡 *입학사정관제로 인한 대입컨설팅 증가 우려	'09 이명박정부



토론 1

# 중산층 서민의 학습복지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강 윤 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 I 들어가며

- 중산층 서민의 학습복지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보다 우선 가장 시급한 입시 사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를 기대한다.
- 사교육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 규모와 대상이 점점 확대되어 이제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문제에 대한 접근은 초중고 별로 따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그 최종 목표는 역시 대학입시이다.
- 사교육의 원인이 학벌중심 사회구조 및 대학서열화로 인한 입시 경쟁 체제, 공교육 부실 등 복합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나, 단순하게는 자녀를 좋은 직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위해서 외고 등 특수목적고에 입학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그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국제중과 같은 곳에 보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II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방향

- 정책 목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
  - ‘중산층 서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정책 목표인 ‘학교 교육력 신장과 학습자 학습력 신장’,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학습복지국가 실현’은 너무 과다하다.
  - 이 중에서 ‘학교 교육력 신장과 학습자 학습력 신장’만 제대로 실현되어도 사교육비는 경감된다.
-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방향을
  - 긴급 필수 대책과 중장기 대책,
  - 초중고대학별 대책,
  - 학교 내 대책과 학교 밖 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실현가능(예산, 현실적인 수요 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Ⅲ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긴급대책 재구성

#### [학교 내 대책]

##### 1) 기본적인 절대 원칙 지키기

- 교과목 진도 제대로 지키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없어서 따로 공부시켜야 한다는 불만이 많음. 수업시간에 행정업무 처리는 일상이며, 수업 중인 아이에게 대신 채점이나 심부름을 시키는 일, 자습 등 수업과 무관한 일로 수업을 등한시 하는 것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교사가 문제임. 중간고사 앞두고 3일 만에 진도를 한꺼번에 나갔다는 불만 등, 유사사례 빈번. → 부적격교사 범주 확대와도 연결.
- 평가에 대한 피드백 교육 실시  
시험을 성적표 기록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 출세우기 교육의 시작. 시험은 학생의 학업능력 수준을 판단하여 이에 대한 후행학습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임. 학교/교사가 학생의 학습을 책임지지 않은 한 사교육은 불가피함.
- 상위권 뿐 아니라 하위권을 특화하는 교육이 필요  
수준별 학습은 수준별 이동 수업 뿐 아니라 교과서도 다르고 평가도 달라야 한다. 현재와 같은 동일한 교과서에 동일한 평가는 특히 하위권의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다. →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습부진아 대책과 연관
-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운영  
교육과정의 최소 도달 목표(성취기준)를 명확히 설정하여 학년 단위, 혹은 학년군 단위의 최소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도책임 역시 공교육에서 맡아야 한다.

##### 2) 교원평가제 및 부적격 교사 범위 확대 필요

- 교원평가제가 정식 논의된 지 6년이 흘렀지만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는 만족도 평가 수준으로 하향. 게다가 그나마 아직도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
- 부적격교사 범위 확대 필요. 현재 부적격교사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나 금품수수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를 저지른 교사에 한정되어 있어서 학습에 무능한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임에도 부적격교사의 범위에서는 빠져있는 상태.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의 공

교육 불신을 가져오며 사교육 증가의 큰 요인.

### 3) 사교육이 붙을 수 없는 다양한 교육과정 및 수준별 학습 및 평가

- 1등급 학생이나 4등급 학생이나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고 동일한 시험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수준별 학습을 한다 한들 결과는 뻔하다. 잘하는 학생은 쉬워서 불만, 뒤처지는 학생은 어려워서 포기한다.

### 4) 고교입학전형

- 고등교육이 아닌 초중등교육에서 다양한 학교를 제공하면 선택은 학생과 학부모가 하는 것이 원칙.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의 권리 침해. 우수한 학교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초중등교육의 목적.
- 특목고  
‘특수 분야의 전문교육’이라는 당초 설립 목적으로 해당 분야 교과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은 당연.
- 자율형사립고  
자율은 학생 선발의 자율권이 아닌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의미. 우수학생 뽑아 좋은 결과 내는 것은 누구나 가능. 학교가 자율적으로 제시한 학교운영 방식을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누구든지 선택해서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자율형사립고 설립의 기본 정신.

### 5) 대학입학전형

- 내신 절대평가는 찬성하나 내신 비중 줄이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의 역행. 내신이 지금처럼 상대평가이고, 지필고사 중심의 평가이어서 사교육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나, 교과목 교사의 평가 자율권을 확대하여 다양한 방식의 내신평가 수용하면 공교육의 몫이 중요해질 것임.
- 수능 출제 및 반영 방식 개선  
수능의 수학 유형을 (가)(나)(다)(라)형으로 세분화하는 방안.  
(가)형 : 수학 /공대/ 수학교육 등  
(나)형 : 자연대(의예 포함) /농대/과학교육 등  
(다)형 : 경제/경영 등 (미적분 포함)  
(라)형 : 인문/사회 등
- 대학의 입학전형은 자율에 맡기되 공적 가치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은 마련되어야 함. 즉, 대학이 공개하는 전형방법은 실질 반영 비율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적 책임으로 묻는 수준의 제도 필요.

-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소수자 배려를 위한 특별 전형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입학사정관제가 기여입학제로 변질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한 사전 장치도 필요. 입학사정관제야말로 절대적인 신뢰 관계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시작 초기 대학의 성실한 운영을 통한 신뢰감 구축이 가장 중요한 요소.

## 6) 방과후 학교

- 방과후학교 운영 관리 매뉴얼 개발 보급 내용에는 정확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목표 성취수준도 포함되어 공개되어야 한다.  
정규 교과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공개되어야 하며 추상적인 교육 목표만을 나열한 계획서는 학부모가 선택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방학기간에도 운영되어야 한다.  
방학이 학원의 성수기인 것처럼 방과후학교도 방학기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특히 약기를 다루는 특기적성 교육의 경우 방학에 레슨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 시간적 제한으로 심도 있는 수업이 어려웠던 방과후학교가 방학 중에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교육이 이루어진 후 반드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이 때 방과후학교와 관련있는 학교교원과 방과후학교 강사,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보아야 한다.

## [학교 외 대책]

### 7) 학원 교습시간 및 학원비 규제 강화

- 청소년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다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 조속한 법제화를 기대.
- 학원인증제 도입  
유해환경 및 자격미달 강사 등이 난립하는 학원을 규제하기 위해 소위 ‘학원인증제’를 도입. 시설, 환경, 강사, 교육과정, 학원비, 학습시간 엄수, 학원비 카드사용 등의 내역에 점수를 매겨서 인증.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도움.
- 에듀마일리지제 도입  
학원비 카드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카드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2~5%)를 에듀마

일리지로 적립. 학원비나 온라인 학원 수강비, 문구나 도서구입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서점과 제휴.

#### Ⅳ 나오며

사교육 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은 결국 사회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들이 많다. 사회적 구조 및 철학의 변화는 당장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제어가 가능한 학교체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학습이라는 학교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 무너진 것을 세우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도입해도 사교육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를 늘리고, 고액 학원비를 단속해서 사교육비를 조금 줄인다한들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 약간의 틈새만 있으면 또 사교육비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은 학교바로세우기, 즉 공교육 내실화라는 원칙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다.





토론 2

# 사교육비 대책, “확실히” 하라!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장)





1.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 문제는 지속된 과제이다. 선거 때마다 사교육비 해결을 위한 공약이 있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빠짐없이 사교육비 대책이 제시되었다. 이명박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는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오늘의 토론회는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에서 대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2. 그러나 과욕은 금물이다. 과감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이며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 사교육비는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를 강력한 의지나 충분한 준비도 없이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정책을 잘못 다룰 경우 과거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일종의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왜 실패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의 문제는 독특한 교육현실과 사회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일종의 문화로 자리매김 할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3. 사교육비는 날이 갈수록 기세가 강해지고 있다. 특정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을 넘어 서서 학교교육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협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우골탑’으로 상징되었던 교육열이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로 변화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선언한 이상 이 문제를 비켜갈 수 없고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다만,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어떻게 올곧은 진단과 효과성 있는 처방과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하는지가 관건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과 방향은 안타깝게도 과거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사적인 요구와 교육이 사회적 신분 이동의 통로로서 지나치게 수단화되는 경향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사회적 문제이자 사적 영역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한 입시제도를 점수중심의 경쟁을 통한 선발 모델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잠재적 능력을 살피서 선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5. 그동안의 정부정책이 그나마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정책 동향은 철학과 원칙 없이 지나치게 여론에 휘둘리는 모양새이다. 교육관련 정부정책

에 학생과 학부모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정책개발 및 추진에 있어서 당·정·청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학생·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일관성 없는 정책은 신뢰성을 저하시켜 정책변화에 대응하려는 과정에서 사교육을 더욱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6. 특히 학원심야 교습시간 제한을 위한 국가단위에서의 입법화와 관련하여 당·정·청이 혼란을 준 것은 매우 안타가운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한국교총이 2009년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인터넷으로 교원 587명을 대상으로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64.23%가 찬성함.

7. 발제자는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밤 9시로 제한하는 방안(1안), 밤 10시로 제한하되, 필요시 초등학생만 밤 9시로 제한하는 방안(2안)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자 의견은 입법은 명료한 것이 좋고, 현재 오전 5시 이후는 학원 교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 및 학생,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유·초·중·고 학생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시간 운영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8.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춰볼 때 ‘규제’가 맞지 않고, 공부 많이 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말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분명히 할 것은 ‘규제’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토론자는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공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규제’로 보는 것 자체가 타당한 것은 아니며, 사교육비 경감 못지않게 아동 및 학생,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또한, ‘공부’도 ‘공부’ 나름이라는 점이다. 점수위주의 선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공부’는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결코 이로운 것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오늘 발제자의 발표내용은 지난 6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다만, 내신절대평가 도입 및 내신반영비중 축소나 중·장기적인 대책은 이전의 정부 발표보다는 강조, 추가된 것으로 본다.

10. 토론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있어 중요한 점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접근, 발생한 사교육을 사교육 시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완·대체하는 접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직업교육을 활성화 하는 접근과 사회경제적 구조적인 접근으로 구분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11.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학은 고교를, 고교는 중학교를, 중학교는 초등학교를 ‘점수중심의 선발경쟁’으로 움직이는 곳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실 가능한 접근은 특성화 중학교나 특수목적고는 본래 취지에 맞게 입학전형을 개선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과활동 기록을 교과별 학업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절대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한국교총이 2009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인터넷으로 교원 556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내신평가를 국가수준 성취기준을 준거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62.8%가 찬성함(내신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찬성: 32.4%, 지나친 내신 경쟁을 막을 수 있으므로 찬성 : 30.4%).

이는 현재의 학교 평가는 집단 속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과도하게 중시하여 교육적이지 못하며 상급학교에 진학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함에 따라, 학교별 학력차로 인한 내신에 대한 불신 문제 해결, 등급제로 인한 내신 점수 경쟁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함에 따라 우려되는 성적 부풀리기 등의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므로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은 국가수준 학업성취 기준의 적절성 및 현실적합성 제고, 엄정한 성적 관리를 위한 교원의 평가 전문성 신장 방안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은 모집단위별, 학과별로 전형요소를 특성화, 다양화하고 책무성을 갖고 고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한다면 ‘점수중심의 선발경쟁’에서 초래되는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학교교육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12.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사교육의 수요는 사교육시장에 맡길 것이 아닐라 대체, 흡수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방송, 에듀넷 등 정보통신매체로 학교교육을 최대한 지원하되, EBS 등 공공기관은 입시위주가 아닌 학교 정규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주제별·난이도별 교육프로그램을 세분화, 보충 학습·개별학습 시 이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 현직교사의 EBS 파견제 도입을 통해 EBS 수능강의 교수법 및 교재집필 등 콘텐츠 개발과 함께 파견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또한 △IPTV 등을 활용하고 U-learning 학습시스템을 구축하되, 방과 후 학교 등에서 IPTV 활용,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정규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온·오프 블렌디드(On-off Blended) 학습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교수 및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하고, 유·초·중·고교별 유비쿼터스(Ubiquitous) 학습지원 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점검·계획할 수 있는 Self-Feedback System 구축과 추론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PBL(Project Based Learning) 방식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공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상 온라인 학습지원 포털사이트 운영을 통해 사교육시장의 수요를 흡수, 대체할 필요가 있다.

13. 아울러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제 강화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소외계층의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망 구축,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계화와 함께 평생교육 예산을 전체 교육예산의 3% 수준으로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생애에 걸친 직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안 마련, 시·군·구단위 진로학습 상담센터 설치, 여성·고령인구·취약계층 등에 대한 평생교육 투자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및 경제적 지원 확대, 직장인의 유급 학습휴가제 시행 및 성인 직업교육훈련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유아단계에서 교육과정 전반에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되어 자연스럽게 진로·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사교육비 문제가 교육문제를 넘어선 사회문제임을 감안할 때 교육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지위 상승이라는 교육의 지나친 수단화에 대한 큰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사교육비 문제에 접근하는 생각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로서 사교육 대책이 대학, 기업 등에서의 역할과 그에 따른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영역으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 국회 또는 대통령직속 기구로 사교육비경감위원회를 두어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거나 필요하다면 학교-대교협-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접근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5. 사교육비 대책, 이명박 정부가 비켜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정면으로 부딪치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기왕 할 것이라면 “확실히” 하기를 바란다.



토론 3

# 학교민주화, 생활민주화

- 지금, 여기부터 공교육체계 정상화를 -

김 선 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 I 공교육의 제자리 찾기

-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인성교육과 건강한 노동력을 갖추기 위한 사회화의 과정임. 그러나 한국사회의 교육현실은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학력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으로 전락한 것이 현실임.
- 결국 대학 중심의 학력경쟁은 과잉교육과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 학교 내 급우들과의 경쟁과 학교폭력, 학원중심의 교육 중시와 공교육 교사 멸시 등의 현상을 초래하여 공교육체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됨.
- 더욱이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인해 공교육분야를 교육공급자-교육상품-교육소비자의 구조로 파악하여 경쟁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이를테면 방과후 교육의 사설교육업체 허용을 들 수 있음.
- 공교육체계 붕괴는 학교가 사회적 지위상승의 통로이자 계급적 불평등을 양산하는 재생산기제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 이미 상당부분 무너진 공교육체계를 다시 세우기가 시간상, 재정상 쉽지는 않겠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장기적 추진계획 속에서 공교육의 체계 재설계 방향으로 나아가간다면 지금도 그리 늦지 않았음.
- 다만 이명박 정권의 핵심공약인 ‘사교육비 절반, 학부모 만족도 2배’의 교육공약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논리를 벗어나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공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함. 그 동안 발표했거나 추진중인 정책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면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함.

### 1.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및 초등학교 공교육비 부담 0%

- 선진국의 평균 의무교육 기간이 11년인 반면 우리는 9년으로 2년이나 짧고 그 내용 면에서도 지극히 부실함.
-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98%가 진학함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로 연간 1.8조원, 급식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로 약 1조원을 학부모가 직접 부담함.
- 중학교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2008년도 학부모에게 걷은 공립중학교 운영지원비 총액은 약 3,738억여원으로 전체 학교교육비 4,530여억원의 83%에 이룸. 공립초

등학교에는 1인당 학교교육비 38만여원을 지원했으나 공립중학교에는 30여만원  
 씩만 지원함.

- 2009년 3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18조7천2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295억 원이 증가하였고 가구당으로는 112만2천원에 달  
 함. 2000년의 6조1천 620억 원에서 8년 만에 3배로 늘어남.
- 1인당 평균부담경비 측면에서는 고등학교 241만원, 중학교 64만원, 초등학교 51  
 만원으로 초·중학교 무상교육을 무색케 하고 있음.
- 학교급식비, 각종 교재비, 교복비, 급식비 또한 국가부담화하여 해야 함.
- 2003년 학교급식 학생은 전체의 90%인 703만 명이며, 전체 학교의 98%인 10,343  
 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음. 전체 비용은 연간 2조 8,531억 원으로 이중 학부모가  
 82.5%인 2조 3,533억 원을 부담
-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학부모는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과외비용 외에도 학교와  
 관련하여 매년 약 2.4조원 정도를 부담(2004년 기준)하고 있으며, 기타 야외수업  
 이나 특지적성 교육 등의 활동비에 부담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이 비용이  
 없어 공교육 내에서조차 소외당하고 있음.

## 2. 교원당 학생수 15명 증원 및 학급당 학생수 20명 감축

- 2004년 현재, 우리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3.6명, 중학교 35.5명으로  
 OECD 국가 평균(각각 21.4명, 24.1명)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임.
- 2005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초등학교 26.7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OECD 평균 각각 16.2명, 13.3명, 12.6명을 훨씬 웃돌고 있음.
- 이는 학생 개개인의 인격과 학습권을 존중하는 개인지도와 인성지도를 불가능하게  
 하여 점차 능력위주, 엘리트위주의 경쟁교육을 강조하게 됨.
- 따라서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증원을 통해 과중한 수업부담과 잡무에서 벗어  
 나 학생들과의 교류시간을 넓히게 함으로써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고, 평  
 등가치를 지향하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전개되도록 해야 함.

## 3. 교육격차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 2004년도 통계청 설문조사에 의하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사람이 63%에 이르고 있음.

- 특히 2004년도 서울시내 지자체별 교육경비 보조금의 경우 강남(54억 6천만원)과 강북(2억 7천만원)의 차이가 20배이고, 2000년~2004년간 합계로 볼 때 강남구와 금천구의 차이가 45.6배로 나타나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사교육비 지출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음. 통계청이 전국가구의 기타교육비를 소득계층 1~5분위별로 파악한 결과, 소득수준 상위 20%에 해당되는 5분위는 월 평균 32만1천253원으로 소득수준 하위 20%인 1분위의 4만6천240원에 비해 6.9배로 전년의 5.9배에 비해 크게 확대.
- 학력 차이에 따른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중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64만1천원으로 2007년의 343만1천원보다 21만 원(6.11%) 증가. 같은 기간 고등학교 졸업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25만8천원에서 233만5천원으로 7만7천원(3.41%) 늘었나는데 그침. 이에 따라 대졸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고졸의 1.56배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사교육비 지출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각종 실태조사에서도 뚜렷이 드러남.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 약 3만4천 명을 조사한 결과, 월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계층의 사교육비는 월 47만4천 원으로 100만 원 미만 계층(5만4천 원)의 8.8배에 달함.
- 지역별로도 서울의 1인당 월 사교육비가 29만6천 원으로 읍면 지역(12만5천 원)의 2.4배에 달함. 정부가 ‘영어 공교육’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영어 교과목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꼽힘. 영어 교과목의 경우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 7만6천 원으로 11.8% 늘어 수학(6만2천원, 8.8%)과 국어(2만3천원, 4.5%) 등 다른 교과목을 압도함.
- 따라서 농어산촌 지역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면적 지원과 이를 위한 재원 확대와 장애아에 대한 교육권 강화, 통합교육 실시를 위한 보조교사제 도입
- 지역별 재정차이를 감안한 재원 분배를 통해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 하여 지역교육이 균등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4. 공교육 재정 GDP 7% 확보

- 2007년 OECD 교육지표 발표내용을 보면, 정부의 공교육비 지출은 4.3%로 OECD국가 평균 5.0%에 못 미치고 있는 반면 사교육비 비율은 GDP 2.9%로 OECD국가 평균 0.8%를 훨씬 상회하고 조사 대상인 26개국 가운데 최고로 1년

전보다 0.1% 증가함. 특히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은 OECD국가 평균의 1/3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매우 열악함. 이러한 정부와 민간부담에 대한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함.

〈GDP 대비 교육비 지출 규모 비교, 2007년〉

구분	교육비 지출규모	공공 부문	민간 부문
OECD	5.8	5.0	0.8
한국	7.2	4.3	2.9

- 한국은행 국민소득 계정의 ‘가계 목적별 최종 소비지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우리나라 가계가 지출한 교육비 규모가 사상 최대인 39조 8,771억원으로 이 중 사교육비(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가정의 개인교습, 입시비용, 보습학원, 참고서 구입비 등) 명목으로 쓰인 돈은 약 19조원으로 가계 전체 교육비 지출액의 절반을 차지함.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구당 239만 2,000원씩으로 이는 전체 가계 소비 지출액의 7.5%에 이룸.
- 민간부문의 부담을 공공부문으로 전환하여 공교육체계 안에서 양질의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Ⅱ 사교육 규제 강화

- 사교육 광풍은 노동자의 노후설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고 전인교육 등 교육이념을 무력화시킴. 또한 강남을 진원지로 하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현상을 고착화시키고 시장안정을 위한 제반 정책들을 백약무효화 시킴.
- 이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거나 방치하는 대표적인 직무유기로 볼 수 있음. 사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부모들은 부업을 해야 하거나 심지어는 반사회적인 일에도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남.
- 학원비 상한제 도입, 카드 의무사용, 수업시간 10시 제한 등을 추진하고 단속 강화와 벌금규정 도입

## 1. 학원비 상한제 도입

- 2007년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 1천원이며 고등학생은 월평균 60만 6천원, 중학생은 43만 3천원임. 가구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64만 6천원으로 가구 전체 소득 대비 19.2%를 차지해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1/5이 사교육비에 쓰이고 있음.
- 교육열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유명한 강남에서는 심화학습반, 논술반, 특목고반 등으로 과목을 나누고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수강료가 107,200원(단과)이 기준임에도 실제로는 1,388,505원에 달해 초과 금액이 1,271,305원으로 무려 13배나 차이가 나고 있고 특별면접반을 운영하여 300만원씩 받는 곳도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발표가 있음.
- 이러한 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전체 가구의 26%는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부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정상적인 가계 수준으로는 사교육비 감당이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교육청은 기준 학원 수강료 위법 학원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으며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몇몇 학원장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음.

## 2. 학원비 카드사용 의무화

- 사교육비의 70%가 현금으로 지출되고 44%는 현금영수증 없이 지불되어 약 15조원이 지하경제화 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세원 포착을 어렵게 만들어 막대한 세금을 놓치게 하고 만들.

## 3. 학원 수업시간 10시 제한

- 학원 수업시간을 10시까지로 제한하여 사설학원이 아닌 EBS교육 청취 등을 통한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게 함.

### Ⅲ 교육체계 정비

#### 1. 초·중등학교 교육을 창의력 중심의 교육으로 전면 개편

- 교과 과목별 점수제 및 일제고사 등 폐지, 학년별 이수자격을 규정한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국민핵심능력표준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필수 이수학점만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함.
- 조기 이수자격을 통과 학생은 자신의 장래희망이나 특기에 따라 특정 과목에 대한 심화학습 또는 특성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함.
- 학교, 공교육 체계내에서 특기적성 교육까지 책임지도록 함.

#### 2. 대학 진학비율을 정상화하고 대학의 기능별 재편

- 학문중심의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가 양성 대학 및 기술교육 중심의 산업대학으로 기능 분리하여 대학을 재편.
- 이중 몇 개의 대학은 포항공대나 KAIST 처럼 특화하여 연구개발 중심 대학으로 육성
- 너무 높은 대학 진학률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 진학비율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낮추고 평생교육시스템을 도입

### Ⅳ 발제문에 대한 몇 가지 보충의견

#### 1. 공교육 내실화 방안 미흡

-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서 과다한 학생수, 부족한 교원 등 학교교육의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이 없고 교육과정, 교수방법 등 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만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그럼에도 일본교과서 문제에서 드러났던 역사 및 철학과목에 대한 대안주장은 없음.
-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등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간 교육격차 문제 해소 방안도 공교육체계 내실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 그럼에도 교육격차해소 방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 2. 대학교육에 대한 근본적 대안 부재

-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학벌주의 사회 풍토를 낳고 있으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학교육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방안이 없고 다만 내신성적 반영 비율 축소 등 입시제도 개선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현재와 같은 높은 교육열과 대학진학율은 우리 사회의 학력중심의 왜곡된 노동 시장 구조를 더욱 공고화시킬뿐 아니라 생애단계별 맞춤형학습을 통한 국민 평생 학습권을 전혀 보장하지 못할 것임.
- 따라서 전문계고를 통한 직업교육체계 또한 분명한 한계를 지닐 것임.

##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국제중학교 등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특목학교 폐지

-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국제중학교를 폐지하여 대학입시 경쟁통로를 차단하고 관 광·IT·예체능 등 특정 목적고를 확대해야 함.

## 4. 영어교육을 방과 후 교육이 아닌 정규과목으로 확대

- 기존의 영어교육을 영어회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정규직 교사를 대 거 확충해야 함. 몰입영어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사교육과 방과후 교육만으로 충족시키려는 것은 효과를 보장할 수 없음.

## 5. 그 밖에...

- 예체능 과목 강화
- 장애인보조교사 확충을 통한 통합교육 실시
- 학교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으로 학생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정신건강권 보장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가 원인이 아니라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보육정책 등 인프라 부족이 정확한 원인일 것임.

## V 마치며

최근 민주화 후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1987년 민주항쟁이 일제강점기-분단-한국전쟁-군사독재정권으로 인해 억눌렸던 정치 민주화를 일정정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경제적 민주화를 동반하지 못한 민주화였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치 영역보다 훨씬 우리의 실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영역의 민주화는 최근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놓고 보면 더욱 요원한 숙제인 것 같다. 물론 정치적 민주화가 완벽한가 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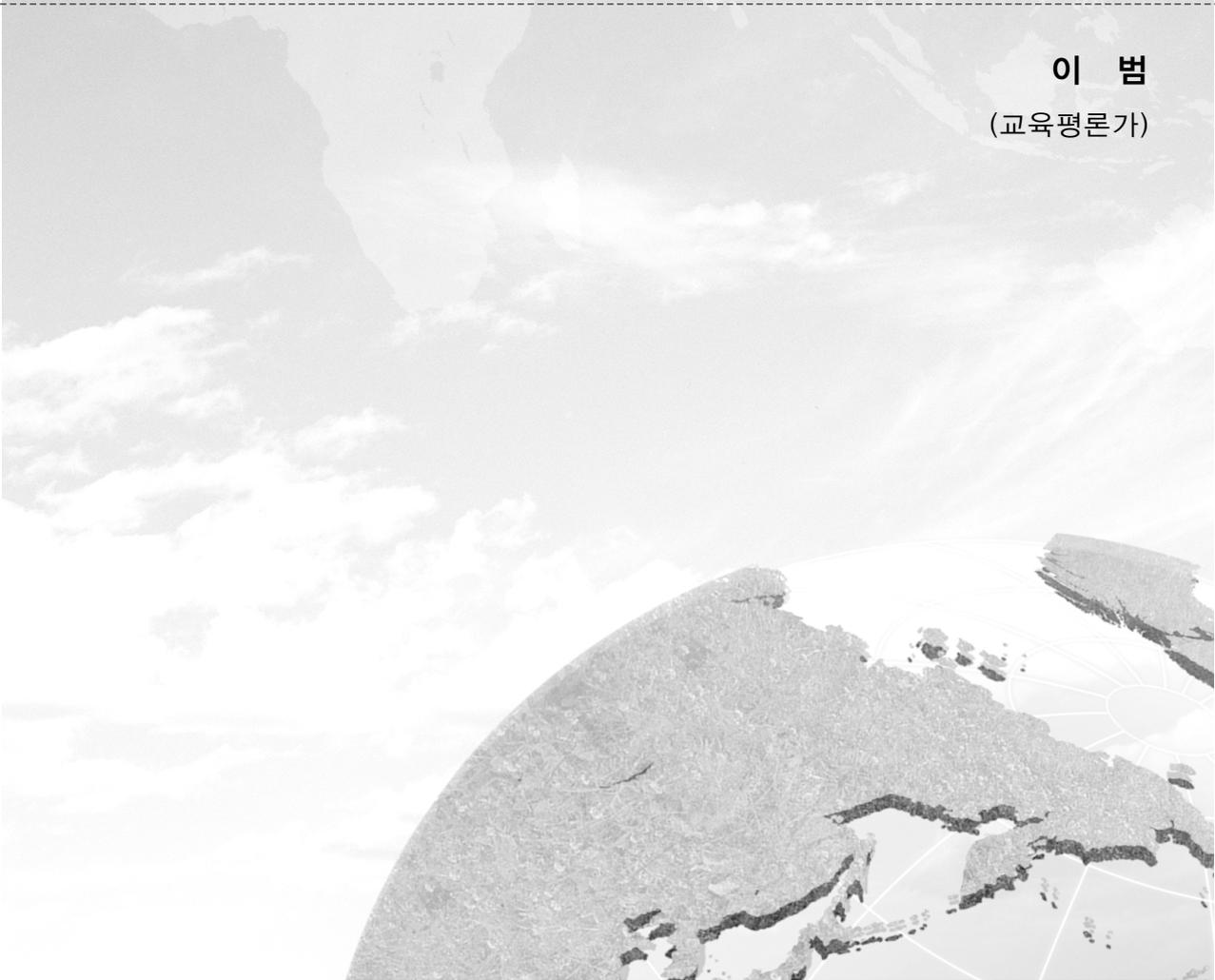
경제적 민주화의 부재는 단지 전체 사회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던 ‘경제’를 모든 가치의 우선 순위에 올려놓았고, 신자유주의 사상의 세계적 확산은 경쟁, 적자생존의 논리를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시켰다. 이러한 민주화의 부재에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이다. 학교교육이 사회의 지배적인 위계원칙을 암묵적으로 학생들에게 전수하며 불평등한 대우를 정당화 하거나 합법화하는 등 불평등구조를 은폐하고 체제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의 산실역할을 한다는 부르디외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학교교육의 순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측면으로 작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 민주화와 생활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최근의 민주화 담론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촛지문제, 사립학교 부정비리, 교장 중심의 권위적 운영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유명무실화, 성차별적인 (이름은 달리 부르더라도) 녹색어머니회, 자식을 볼모로 하는 급식 노동력 착취, 통합교육 부재로 인한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그리고 새터민 차별이 넘쳐나는 우리사회의 축소판인 학교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토론회가 비록 ‘중산층, 서민의 학교복지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국한되고 있지만 ‘학교 민주화, 생활 민주화’라는 보다 철학적인 고민 속에서 다루어지기를 바란다. 제도가 인식을 바꿀 수 있듯이 인식 전환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 4

#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토론



이 범  
(교육평론가)



## I 사교육의 원인 : ‘선발경쟁’과 ‘학교관료화’

### 1. 선발경쟁

- 선발경쟁이 극심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대학서열화 + 학벌주의
- 선발경쟁에 대한 입장
  - ① 우 파 : 대학서열화 인정, 학벌주의 타파(영국, 미국 모델)
  - ② 좌 파 : 대학서열화 타파 (유럽 모델)
  - ③ 수구파 : 대학서열화 및 학벌주의 인정

### 2. 학교관료화

- 학교관료화의 두가지 양상은 ‘획일적 교육’과 ‘무책임 교육’
- 획일적 교육의 원인
  - ① 교육과정 :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교습내용 규정
  - ② 교 과 서 : 국정·검인정 교과서 제도
  - ③ 평가제도 : 교사-학급별 평가가 아닌 학년별 평가
  - ④ 학교공간의 부족 : 수업유연화(수준별 이동수업 등) 어려움
- 무책임 교육의 원인
  - ① 교육보다 행정에 치중된 학교조직 및 교사업무 체계
  - ②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원 승진 및 평가제도
  - ③ 경직된 수업방식
  - ④ 보완교육, 돌봄교육 체계 미비
  - ⑤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수가 지나치게 많음

## II 사교육비 증가 요인

1. 대학-사회적 요인 : 대학서열화 & 학벌주의
2. 학교 요인 : 무책임 교육 & 획일적 교육

### 3. 선발방식 요인

- 요구하는 과목수 많고 범위가 넓을수록 사교육비 증가
- 여러가지 전형요소를 복합적으로 요구할수록 사교육비 증가
- 시험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사교육비 증가

### 4. 문화적 요인

- 공교육에 대한 불신 팽배
- 사교육(특히 학원교육)을 당연시하는 풍조

## Ⅲ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긴급대책에 대한 비평

### 1. 고교입학전형 선진화

- ‘외고 정상화(또는 특성화)’라는 문제의식이 미흡함. 외고의 교육과정을 확실히 특성화시켜야 외고 입학수요가 감소. 외고+국제고+국제중 통폐합하여 중-고 통합 전문학교로 전환하여, 제2·제3외국어 교육을 특화시킴으로써(제2·제3외국어 인증졸업제를 실시) 외국어 습득에 관심과 재능있는 학생만 지원하도록 하는 대안 제안. 이렇게 되면 입학정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부수적 효과 있음.
- 과학고는 수학·과학만, 외고는 영어·국어만 반영하는 등 내신 반영과목의 대폭 감소 방안에 공감
- 외고에서 ‘듣기평가, 심층면접, 논술, 입학사정관전형’ 가운데 학교장 자율로 선택하게 하고 과학고에서 ‘수학 또는 과학 평가’를 실시한다고 모호하게 밝히는 것은,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사교육 의존심리를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음.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확실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자율형사립고 및 기숙형자율학교 선지원-후추첨 방식 도입에 공감

### 2. 대학입학전형 선진화

- 내신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사교육비 절감 효과 상당히 나타날 것. 내신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향이기도 함(대부분의 선

진국에서 중고등학교 내신은 평점 또는 점수로 매기는 절대평가이며, 석차를 매기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과 한국밖에 없음).

- 내신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대책은 보다 구체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내신평가가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내신위주 전형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균형 선발 효과를 내는 대입 전형들(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 등)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 발생.
- 수능 체제 개편의 방향에 공감.
- 사교육비 문제와는 별도로, 장기적으로 내신교육과 수능을 모두 서술형·논술형으로 전환하는 선진화방안 검토할 필요
- 입학사정관제가 3각형(‘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아니라 5각형, 6각형 구조를 취하여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재. 특히 명문대학들이 각종 경시대회 입상실적이나 토폴, 한자급수 등을 반영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건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
- 입학사정관제 특유의 불투명성이 대학 서열경쟁의 도구로 활용되어 사회적 혼란과 사교육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부재.

### 3. 학원 교습시간 제한

-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심야 뿐만 아니라 아침 강의도 규제할 필요. 현재 지배적 사교육이 학원이므로, 교습시간 제한이 사교육비 제어에 효과 있을 것.
-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원활히 이뤄지는 것이 중요함.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학부모로 한정하지 말고 일반 시민으로 확대할 필요.

### 4. 교원평가

- 승진(근평), 성과급, 교원평가 등 3종의 평가체제로 인해 학생을 위한 일상적 교육활동에 충실하기보다 ‘이것 저것 챙겨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임. 평가체계를 단일화하여, 학생·학부모에 의한 평가를 핵심으로 하고 다면평가(학년별·과목별)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 종합평가만 하지 말고, 부문별로 우수교사를 가려내어 포상하거나 승진에 반영할 필요.(예를 들어 ‘재미있게 수업하는 교사’, ‘어려운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하는 교사’, ‘질문에 친절하게 응해주는 교사’…)

- 교사 개인별 평가에만 치중하면 교사들의 경쟁이 촉발되어 협력이 저해될 가능성. 개인별 평가와 집단별 평가(학년별·과목별·학교별 등)를 조화시킬 방법 강구해야 함. 단, 현재의 학교평가(3년마다 시행)처럼 불필요한 보고서를 양산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집단별 평가 또한 학생·학부모에 의한 평가를 핵심으로 해야 함.
-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황. 행정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교육본연의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 필요.

### 5. 예체능 특성화학교 확대

### 6. 방과후 영어무상교육 추진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 7. EBSi 초·중학생 학습지원 전면 확충 및 특목고·우수고 현장수업 동영상 제공 → (5)~(7)의 내용에 공감.



토론 5

# 이명박 리더십의 성패=사교육과의 전쟁 승패

최진

(경희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성패 여부는 사교육과의 전쟁 승패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문제는 국민적 현안으로 떠오름. 집 권 2년차인 이 대통령이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정책영역은 교육분야임. 교육문제는 남녀노소 없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대통령이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만한 가치가 충분한 분야임.
- 이명박 대통령이 정파와 계층과 노선을 초월하여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사교육비 문제임. 이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정책 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교육정책을 통해 ‘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이미지 탈피
  - 서민경제, 가계, 실업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제살리기에 부합
  - 저출산, 해외 유학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강화에 유리
- 이제 사교육비 경감문제는 교육당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나서야 할 시점에 도달한 국가적,국민적 현안이 됨
  - 이대통령이 6월23일, 사교육비문제에 개혁적 태도를 보인 것은 바람직함
  - 국회 차원에서 ‘사교육’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용기있는 결단
-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띄고 있음. 과거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이나 언론과의 전쟁 등 숱한 정책 적 전쟁상황이 있었지만, 사교육과의 전쟁이야말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 심하여 승리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 다만, 사교육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자동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사교육과의 전쟁과 더불어 공교육을 살리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공 교육을 희생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이 교수나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제 사교육비 문제는 추상적이고 방대한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손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함. 또다시 학생들을 상대로 시행착오적 교육실험이 이루어져서는 않됨. 신중하되 과감한 교육개혁이 필요한 시점임.
- 논의만 무성했던 공교육 활성화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교과목의 축소조정, 토론학습, 현장학습
  - 교수법의 개선, 관료적인 학습법 탈피, 조기 전문화, 리더십 교육 등

-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CEO형 리더십과 실용주의적 리더십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통합적 리더십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특히 사교육비 경감정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함



토론 6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방향

양성광

(교육과학기술부 인재기획분석관)





## I 추진 경위

- 지난 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금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첫 번째가 작년 10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이고, 두 번째가 금년 2월 27일,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대책이며, 세 번째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임.
- 여기서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II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 1.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근원적 접근방법

-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게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 공교육을 내실화하면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사교육을 받는 수요가 학교교육을 흡수되고 결국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임.
-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더라도 학교 현장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임.
  - 결국 학교교육이 사교육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학교가 변하여 경쟁력을 갖추려면 학교장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정부에서는 학교장의 책임하에서 좋은 학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난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학교 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음.
  - 그 동안 국가통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을 바꿔 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을 주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학교를 많이 만들 것임.
- 이와 함께 그 동안 학생들끼리만 경쟁하던 구조에서 학교와 교원들도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책무성도 높여 나갈 것임.

## 2. 교과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주요 내용

- 이번에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시제도를 선진화하며,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와 함께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가. 학교가 경쟁력 있게 변모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화 확대

- 학교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상 자율권을 대폭 확대
  - 현재 국가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였음.
    - ※ 국민공통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 20%범위 내에서 수업시간 증감 편성
    - ※ 교과별로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를 확대, 학생의 학습부담을 경감
- 학교장이 책임경영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인사권을 강화
  - 모든 학교의 장에게 교원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을 부여
- 산업 및 예·체능 분야 전문가,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단에 설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임.
- 기간제 교원의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게 하였음.
- 이와 같이 학교현장 중심의 자율 확대화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교육이 가능해지고, 학교간 ‘잘 가르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나. 대학 수업처럼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 도입

-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같은 교실에서 동일하게 교육받고 있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임.
- 영어교실, 과학교실 등과 같이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진로, 적성에 맞춰 교과목을 선택하여 듣도록 하겠음.

- 교사가 교과교실에 상주하면서 다양한 학습자료나 기기를 활용하고 수업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한다면 수업의 질이 상당히 높아질 것임.
  - ※ 교사가 이동하는 수업 방식에서 특성화된 교실에 교사가 상주하고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수준별·맞춤형 수업을 듣는 형태로 전환
  - ※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도입(우리나라 '09년 5,267중·고교 중 33개교에서만 운영)

#### 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

- 현행 교원평가제도는 승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교원의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 ※ OECD 교원정책 검토단('03) :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 권고
  - ※ 3월 실시 여론조사 : 국민의 76%, 교원의 63%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
- 금번에 도입하려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임.
  - ※ 교사의 수업·학생지도, 교장·교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상급자 및 동료교원 상호평가 / 학생의 수업 만족도,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실시
- 교원평가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임.
- 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학교 내에서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많은 초·중고 학교 1,440개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여 교당 평균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것임.

#### 라.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시문제 개선(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 그동안의 성적위주의 획일적인 선발 방식에서 탈피,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체제로 전환하겠음.

##### 1) 대입전형

- 입학사정관제가 대학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15개교를 선정하고, 입학사정관 양성 지원기관 5개교를 선정하여 지원
-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성적위주의 선발관행을 지양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을 개선하겠다는 공동선언문 발표
  - 대학총장, 시도교육감, 교육전문가, 학부모 및 사회 각계 인사로 교육협력위

원회를 구성, 성적위주의 선발관행을 지양하는 대입전형 방법 및 공교육 정상화방안에 대해 논의 계획

## 2) 외국어고 입시

-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와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금지하고,
  - 중학교 내신 반영시 수학·과학 가중치를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음.
  - ※ 서울시 교육청 2010학년도 외국어고 입시개선('09.6.18) : 영어 듣기평가 6개 외고 공동 출제(중학교 교육과정 내), 내신 가중치 합리적 조정 등

## 3) 과학고 입시

- 2011학년도 입시부터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없애고, 모든 학생을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KAIST식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임.
- 이 밖에 시험위주의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학교장 추천과 학회심사로 개선하고, 시험위주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을 시험 대신 영재교사의 ‘관찰·추천’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음.
- 또한 중·고등학교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과 연결하여 공개함으로써 학교 기출문제와 관련하여 사교육비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임.

## 마. 사교육 대체서비스를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

- 사교육 없이도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우수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하여 학교 당 평균 1.5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임.
  - ※ 금년에 400개 선정, 2012년까지 1,000개로 확대
  - 이러한 예산은 3년 내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보조 강사 및 방과후학교 행정진담인력 채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용됨.
- 방과후학교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하였음.
  - 학부모가 코디네이터로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방과후학교 학생과 강사 관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 수요조사 등을 담당케 하고,

- ‘엄마품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학부모가 초등학교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학생에 대한 방과후 교육·돌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 EBS 수능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교사들을 EBS 교재 연구 및 강의 전담교사로 파견하는 ‘파견교사제’를 도입하고, 전국 교사와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교재 공모제’를 실시하여 우수 집필자를 확보할 계획임.
- 또한, 학습·평가와 이력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학습 플래너(Planner)를 도입하여 개인별 학습관리를 강화하고, 사이트의 편의성을 높여 나갈 것임.

## 바.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

- 금년 9월부터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을 선발하여 학교 현장에 배치하고, 현직 영어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를 확대할 계획임 (‘08년 1,200명 → ’09년 1,500명)
  - ※ 초등(2,000명) : 방과후학교 강사(’09.9)를 거쳐 정규 수업에 배치(’10.3)
  - ※ 중등(3,000명) : 확대되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배치(’09.9~)
- 영어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 공간을 설치할 예정임.
  - ※ 초등 영어체험교실  
: 2,832교(09년, 49%) → 4,322교(10년, 74%) → 5,813교(11년, 100%)
  - ※ 중등 영어전용교실  
: 3,571교(09년, 68%) → 4,419교(10년, 84%) → 5,267교(11년, 100%)

## 사.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초·중·고 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 현재 시·도별 조례로 정하여 운영 중인 학원 교습시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교습시간 위반과 학원비 초과징수 등 불법·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하였음(’09.12월 목표)
- 온라인 교육기관의 수강료도 규제하기로 하였음.
  - 그동안 온라인 교육기관은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수강료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 제도를 신설하여 고액 수강료 징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또한 학원의 허위·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적용, 학원이 특목고와 대학 합격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표시하려 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도할 방침임.

### 아. 교과부, 시도교육청 등의 책무성 제고

-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공교육 경쟁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성과의 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함으로써 시·도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로 하였음.
- 교육정책에 대한 사교육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음.
  - 다수의 교육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단계부터 해당 정책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점검하고 사교육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각 대학의 전형유형과 전형방식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학교 수준에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진학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대교협에 대입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Ⅲ 주요 발제 내용 검토

- 발제 내용은 추진배경, 사교육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많은 부분이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비슷한 측면이 있음.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긴급대책’에서는
  - 특목고 입시에서 내신반영을 대폭 제한하고, 대학 입학전형 선진화를 위해 내신 절대평가 도입과 내신 반영비중 축소 등을 제안
  - 학원법을 개정하여 학원 교습시간을 밤 9시(1안), 또는 밤 10시(2안, 필요시 초등학교 9시)로 규제할 것을 제안
  - 권역별로 예체능 특성화 학교(예체능 교과 중점학교)를 지정하여 예체능 계열 진학 희망자의 사교육 수요 흡수를 제안
  - 방과후 학교 영어 무상교육 추진 등을 제안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서는
  -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영·유아교육 공교육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초·중학교 방과후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고등교육 및 직업 교육 학습포탈 구축 등을 제안
- 제시된 주요 내용들은 금번 토론 결과와 교육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여부를 검토할 것임.

#### IV 향후 계획

- 교과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 이를 위해 이미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고 오늘 토론회와 같이 각계의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후속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